

간행물관리번호
KYWA-2021-059-10

2021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contents

제1장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개요	1
1. 추진배경 및 개요	3
2. 추진경과 및 절차	5
3.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6
제2장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주요활동	7
1. 출범식	9
2. 정책발굴워크숍	11
3. 본회의	12
4. 결과보고회	13
제3장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17
1. 정책영역 선정 및 정책과제 발굴과정	19
2. 정책과제 구성 체계	20
3.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세부내용	21
4. 소관부처 검토의견	61
제4장 붙임자료	79
1.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81
2. 2020년 정책과제 및 모니터링 결과 세부내용	85

제 1 장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개요

1

추진배경 및 개요

- 국제기구(UN, ICNYP)는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최고위층 정치인들의 의지와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청소년 정책을 국가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격상 권고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영역에서 참여가 확대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청소년계의 여론 형성
-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기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5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4년에 시범사업 이후 매년 개최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5. 12. 22.)

-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 6대 분야 20개 과제 제안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6. 10. 27.)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5개 분야 37개 과제 제안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7. 11. 2.)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4개 분야 18개 과제 제안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8. 11. 21.)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6개 분야 35개 과제 제안

제5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0. 1. 12.)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4개 분야 20개 과제 제안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0. 11. 26.)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3개 분야 53개 과제 제안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1. 11. 18.)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3개 분야 41개 과제 제안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2. 11. 23.)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3개 분야 89개 과제 제안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3. 11. 21.)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3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4. 11. 21.)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4개 분야 31개 과제 제안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5. 11. 20.)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6. 11. 24.)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7. 11. 17.)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8. 11. 23.)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제15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9. 12. 6.)

- 청소년 경제활동, 안전, 양성평등, 인권, 학교 밖 청소년지원 5개 정책영역과 특별과제 1건 포함 총 28개 과제 제안

제16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20. 12. 4.)

-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5개 분야 총 33개 과제 제안

제17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21. 12. 3.)

-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 5개 분야 총 30개 과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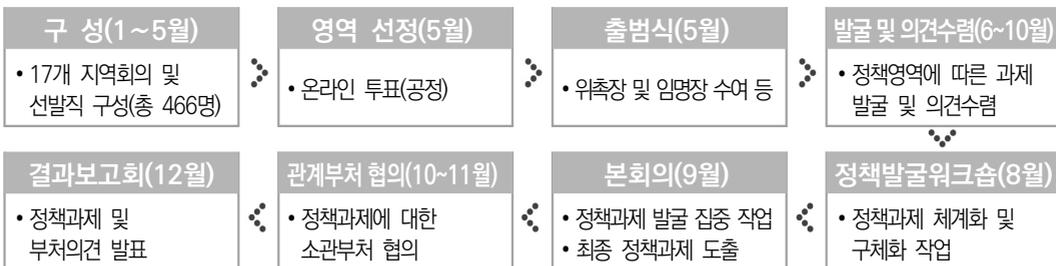
2

추진경과 및 절차

추진경과

- '21. 1월 기본계획 수립
- '21. 2. 18.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담당자 워크숍
- '21. 1~5월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및 선발직 구성(466명)
- '21. 5. 10.~14.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 및 정책영역 선정투표: '공정' 선정
- '21. 5. 21. 출범식: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 등
- '21. 5~11월 지역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활동
- '21. 6~7월 정책과제 1차 분류 및 체계화 작업
- '21. 6~8월 일반 청소년 의견수렴
 -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6~8월)
 - 대한민국 청소년 원탁회의(8.28.)
- '21. 7~9월 지역회의 의견수렴 및 검토: 1차(7월), 2차(8월), 3차(9월)
- '21. 7~10월 대표자 회의
 - 실천과제 공유 및 정책과제 논의(7.24.)
 - 특별과제(환경) 및 행사운영 논의(10.9.)
- '21. 8. 21. 정책발굴워크숍: 정책과제 체계화 및 구체화 작업
- '21. 9월 전문가 자문단 검토
- '21. 9. 18. 본회의: 정책과제 발굴 집중작업 및 최종 정책과제 도출
- '21. 9. 30.~10. 6. 정책과제 선정 의결투표
- '21. 10~11월 정책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 '21. 12. 3. 결과보고회

추진절차



3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 연령별

전체	성별		연령별		
	남	여	만9~15세	만16~18세	만19~24세
434명	167명 (38.5%)	267명 (61.5%)	109명 (25.1%)	231명 (53.2%)	94명 (21.7%)

※ 32명 해촉, 최종 활동자 434명

● 지역회의별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6	25	24	26	24	21	26	19	4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선발직
11	25	18	20	19	24	24	20	48

구성 및 역할

● 정책기획팀(27명)

- 정부에 제안할 정책제안과제 발굴 등

● 온라인소통팀(21명)

- 청소년 이슈 발굴,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 등

● 지역회의의(386명)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책과제 발굴 및 공동 실천활동 전개 등

제 2 장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주요활동

1

출범식

개요

- 일 시: 2021. 5. 21.(금)
- 장 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서울시 중구 소재)
- 운영방법: 화상회의(Zoom)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오프라인 행사 운영
- 참석인원: 총 231명(대면 45명, 비대면 186명)
 - 대면 참석자
 - 지역회의·선발직 대표 청소년 위원 18명 및 담당자 8명
 - 2021년 의장단 3명 및 사회자 2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14명
 - 비대면 참석자
 - 화상회의: 청소년 위원, 청소년 전문가, OB위원 등 146명
 - 유 튜 브: 일반 청소년 및 지도자 등 40명
- 주요내용
 - 위촉장 및 의장단 임명장 수여
 - 추진경과 보고, 출범선언문 낭독 등
- 출범식 사진



진행 일정표

구분	시 간	세부내용
접 수	15:00-15:20	참가자 등록
사전회의	15:20-15:50	의장단 및 지역회의(당연직)-선발직 대표자 회의
본행사	16:00-16:05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16:05-16:10	개회사
	16:10-16:15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경과 보고
	16:15-16:25	청소년 위원 대표 위촉장(19명) 수여
	16:25-16:30	의장단 임명장(3명) 수여
	16:30-16:45	청소년 위원 소감 발표(온·오프라인)
	16:45-16:50	출범선언(선언문 낭독)
	16:50-17:00	기념사진 촬영 및 폐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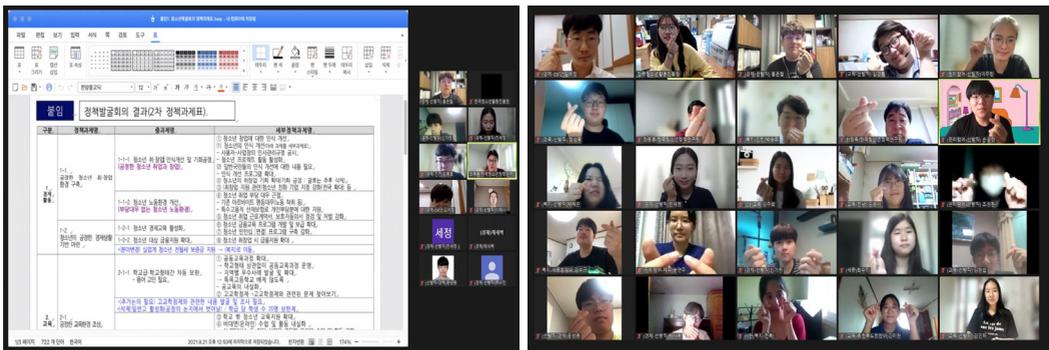
정책발굴워크숍

개요

- 일 시: 2021. 8. 21.(토)
- 운영방법: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 참석인원: 총 46명
 - 의장단 3명, 정책기획팀 위원 22명, 지역회의 대표 위원 12명
 - 선배위원(OB) 자문단 5명 및 청소년 전문가 2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2명
- 주요내용
 - 정책과제 체계화 및 구체화



● 정책발굴워크숍 사진



3 본회의

개요

- 일 시: 2021. 9. 18.(토)
- 운영방법: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 참석인원: 총 50명
 - 의장단 3명, 정책기획팀 위원 23명, 온라인소통팀 위원 3명, 지역회의 대표 위원 11명
 - 선배위원(OB) 자문단 5명 및 청소년 전문가 2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3명
- 주요내용 :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최종 정책과제 도출



● 본회의 사진



4

결과보고회

개요

- 일 시: 2021. 12. 3.(금)
- 장 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서울시 중구 소재)
- 운영방법: 화상회의(Zoom)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오프라인 행사 운영
- 참석인원: 총 231명(대면 53명, 비대면 151명)
 - 대면 참석자
 - 지역회의·선발직 대표 청소년 위원 15명 및 담당자 11명
 - 2021년 의장단 3명 및 사회자 2명
 - 2021년 우수 청소년참여활동 수상자 9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13명
 - 비대면 참석자
 - 화상회의: 청소년 위원, 청소년 전문가, OB위원 등 120명
 - 유 튜 브: 일반 청소년 및 지도자 등 31명
- 주요내용
 -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이행사항 발표
 -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및 수용사항 보고
 - ※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 5개 분야 30개 세부정책과제 제안
 - 2021년 우수 청소년참여활동 시상

● 결과보고회 사진



정책과제 총괄표

분야	정책과제	계	수용		불수용
			수용	부분수용	
계		30	11	17	2
경제활동	공정한 청소년 취·창업 환경 구축	5	1	3	1
	청소년의 공정한 경제생활 기반 마련	2	1	1	-
교육	교육기회 다양화	3	1	2	-
	교육제도 공정성 확보	4	2	2	-
권리 및 참여	청소년 참여권 확대	3	1	2	-
	청소년 인권 신장	2	1	1	-
복지	청소년의 보편적인 복지제도 확대	4	-	4	-
	대상별 청소년 복지 증진	4	2	2	-
특별과제 (환경)	미래를 위한 생활 속 환경보호 기반 조성	3	2	-	1

진행 일정표

구분	시간	세부내용
접 수	14:00-14:30	참가자 등록
본행사	14:30-14:33	국민의례
	14:33-14:36	내빈 및 권역별 소개
	14:36-14:40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영상 상영
	14:40-14:46	개회사
	14:46-14:51	인사말씀
	14:51-14:57	2020년 정책과제 이행사항 발표
	14:57-15:03	2021년 정책과제 및 수용사항 보고
	15:03-15:06	건의문 낭독 및 전달
	15:06-15:20	2021년 우수사례 시상
	15:20-15:30	폐회 및 기념촬영
	휴식	15:30-15:50
2부	15:50-16:50	청소년 위원 교류 프로그램

제 3 장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1

정책영역 선정 및 정책과제 발굴과정

정책영역: 공정

※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투표를 통해 선정(5개 후보군 중 상위 1개 영역 채택)

정책영역 선정과정

청소년 이슈 관련
현안 조사
(4.10.)

영역 후보군
선정회의
(4.26.)

정책영역 선정투표
(5.10.~14.) 및
결과보고(5.21.)

정책과제 발굴 및
실천과제 활동
(5월~11월)

- 청소년 이슈 관련 현안 조사(4.10., 선발직 정책기획·온라인소통팀)
- 정책영역 후보군 선정 자문회의(4.26.): 5개 후보군 선정
- 정책영역 선정투표(5.10.~14.): 5개 후보군 중 상위 1개 영역 선정
- 정책영역 선정결과 보고(5.21., 출범식): 정책영역 선정결과 보고
- 정책과제 발굴 및 실천과제 활동(5월~11월)

정책과제 발굴과정

정책과제 발굴(6~7월)

- 정책기획팀 1차회의(6.26.)
- 정책과제 1차 분류작업
- 정책기획팀 2차회의(7.31.)
- 정책과제표 체계화 작업

정책과제 의견수렴 및 검토(6~9월)

- 지역회의 의견수렴 및 검토
- (1차)7월 (2차)8월, (3차)9월
- 대표자회의 의견수렴(7,10월)
- 전문가 자문단 검토(9월)
- 일반 청소년 의견수렴
-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6~8월)
- 대한민국 청소년 원탁회의(8월)

정책발굴워크숍(8.21.)

- 정책과제 체계화 및
구체화 작업

정책과제 제안

최종 정책과제 선정 (찬반)투표(9.30.~10.6.)

- 최종 도출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투표 진행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 309명
참여(67.8%)

본회의(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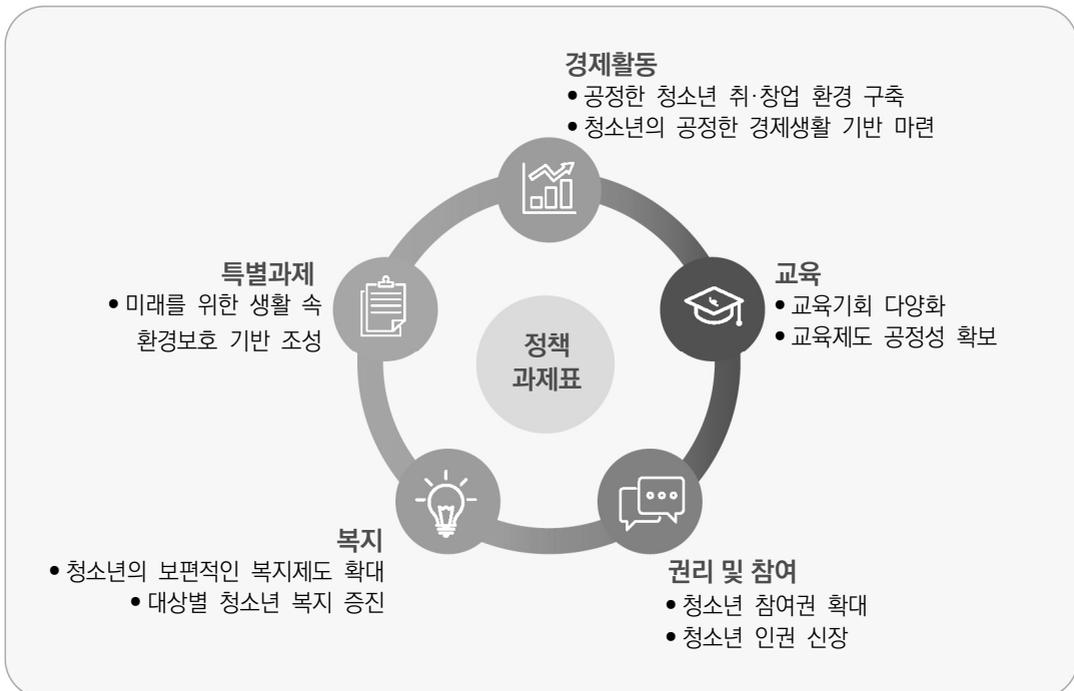
- 정책과제 발굴 집중작업
- 최종 정책과제 도출

2 정책과제 구성 체계

정책과제 구성

- 정책영역 선정투표결과에 따라 1개 정책영역 설정
- 정책영역 내 분야별 1~2개의 정책과제 설정(총 9개 정책과제)
- 정책과제별 3~8개의 세부정책과제 설정(총 30개 세부정책과제)
- 기존 정책영역(공정) 외,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제안하는 특별과제(환경, 대표자 회의 발굴) 추가 제안

정책과제표



※ 총 5개 분야, 9개 정책과제, 30개 세부정책과제 제안(특별과제 포함)

3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세부내용

총 5개 분야 30개 정책과제 제안, 수용률 93.3%(수용 28, 불수용 2)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결과
경제 활동	1-1. 공정한 청소년 취·창업 환경 구축		
	1-1-1. 공정한 취·창업 여건 조성		
	① 청소년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용
	② 청소년의 취·창업 기회 지원	중소기업벤처부	부분수용
	③ 청소년 친화 기업 지정 확대	고용노동부	불수용
	1-1-2. 부당대우 없는 청소년 노동환경 구축		
	④ 청소년 취업 부당 대우 근절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⑤ 청소년 취업 증빙서류 점검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1-2. 청소년의 공정한 경제생활 기반 마련		
	1-2-1. 청소년 경제 자립 지원 확대		
	⑥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수용
	⑦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구축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결과
교육	2-1. 교육기회 다양화		
	2-1-1.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⑧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 비대면 학습(활동) 지원 강화	시·도교육청	부분수용
	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디지털 학습 환경 개선	여성가족부	수용
	2-1-2. 범교과교육 실용성 강화		
	⑩ 학교별 편차 없는 범교과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시·도교육청	부분수용
	2-2. 교육제도 공정성 확보		
	2-2-1. 고교학점제의 내실화		
	⑪ 고교학점제 내 체험형 선택과목 확대	교육부	수용
	⑫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교육부	수용
	2-2-2. 모두를 위한 학습평가제도 마련		
	⑬ 학교 밖 청소년 학습평가 제도 개선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⑭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의 공정성 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권리 및 참여	3-1. 청소년 참여권 확대	
3-1-1.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제안			
⑮ 청소년참여포털 청소년 정책제안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수용
3-1-2. 선거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⑯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분수용
⑰ 피선거권 연령 하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분수용
3-2. 청소년 인권 신장			
3-2-1. 청소년 인권침해 점검 강화			
⑱ 청소년 인권침해 요소 점검 강화		교육부	부분수용
⑲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수용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결과
복지	4-1. 청소년의 보편적인 복지제도 확대		
	4-1-1. 청소년 경제 및 정보 통합지원		
	㉓ 청소년수당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㉔ 청소년증을 활용한 혜택 및 정보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4-1-2. 청소년 복지제도 보편화		
	㉕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회균등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㉖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	질병관리청	부분수용
	4-2. 대상별 청소년 복지 증진		
	4-2-1.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증진		
	㉗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및 지역격차 해소	여성가족부	수용
	㉘ 무업,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4-2-2.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증진		
	㉙ 청소년쉼터 지원 예산 증대	여성가족부	수용
	㉚ 취약계층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5. 특별(환경)과제	5-1. 미래를 위한 생활 속 환경보호 기반 조성		
	5-1-1.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지원 및 새·재활용 확대		
	㉛ 일회용품 분리수거 지원을 위한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확대	환경부	수용
	㉜ 새·재활용 활동 기관(단체) 지원 및 홍보 강화	환경부	수용
	5-1-2.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배치 확대		
㉝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배치	여성가족부, 환경부	불수용	

* 다부처 소관 과제인 경우, 1개 기관이상이 수용 시 부분수용으로 표기

1. 경제활동

- 1-1. 공정한 청소년 취·창업 환경 구축
- 1-1-1. 청소년 취·창업 여건 조성

청소년의 목소리

- “취·창업은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도 할 수 있습니다.”
- “창업에 관심이 있어도 정보가 청년들에게 집중되어있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정보가 필요하다.”

제안배경

- 현재 성인 취·창업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취·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연령 이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수의 증가율은 4.5%을 기록해 전 연령대별 사업체 수의 증가율인 1.8%를 훌쩍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음. 이는 그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60대 연령 이상 사업체 수의 증가율인 3.7%보다도 높은 수치임. 20대의 사업체는 사업체 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20대 사업자 수의 증가율은 전 연령대 평균치의 2배를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 들어 청소년·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참여도가 실제로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¹⁾
-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취·창업에 관한 여건 및 자원 등은 아직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역량이 적은 청소년들이 취·창업에 대해 많이 뒤처지고 있음. 또한 아직까지 청소년의 주요 진로방향을 진학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함.

정책과제

- ① 청소년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전 국민 대상 청소년 창업 우수사례 등을 토대로 청소년 창업 관련 박람회, 교육 세미나 개최

1) 청년창업의 실태와 문제점 <1083호>, 명대신문 박재우, 2021.03.15.

② 청소년의 취·창업 기회 지원

- 청소년 창업 실태 조사 진행
 - 청소년 창업 현황 파악 및 청소년의 창업 수요조사를 통해 청소년 요구에 맞는 창업 지원 기반 마련
- 청소년(만15세~24세) 취업 준비 시 금융지원
 - 청소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기간을 정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
- 청소년(만15세~24세) 창업 준비 시 금융지원
 - 청소년이 창업 준비 시 창업비용 중 일정금액을 값싼 금리로 대출
 - 계획서 평가와 면접 및 발표 후,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예시: 청년창업지원금) 지원

③ 청소년 친화 기업 지정 확대

- 취·창업 지원 관련 청소년 친화기업 지정 및 인센티브 지급
 - (대상) 만 15세 이상(연소근로자, 실습자 포함) 청소년에게 노동을 제공받는 기업
 - (주요내용)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쾌적하게 운영하고, 제시된 조건에 맞게 고용하는 사업장을 '청소년 친화기업 또는 청소년 친화사업장'으로 선정(1년 단위)
 - ※ 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는 신청 제외함(숙박업, 이용업, 목욕장, 게임제공업, 주류 판매 음식점 등)
-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인증마크 부여, 청소년 친화기업 현판 증정, 가산점 제공 등) 및 우수사례집 편찬
-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인증(인증기간 3년 유효)
- 인증을 받은 후 유효기간 동안 인증 기준 적합성과 상태를 조사받을 수 있으며, 충족되지 않을 시 인증 취소를 통보할 수 있음

1. 경제활동

- 1-1. 공정한 청소년 취·창업 환경 구축
- 1-1-2. 부당대우 없는 청소년 노동환경 구축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청소년들의 경제관념은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사회적으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청소년에게 공정한 취업/노동 환경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 “청소년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배경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중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비중은 매우 낮음. 2018년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61.3%이며 제대로 된 근로 계약을 작성한 청소년은 10명 중 3명 미만이었음. 부당대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설문 응답으로는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65.8%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는 1.0%에 불과하였음²⁾.
- 청소년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필요함. 특히 청소년 노동자들은 본인이 피해를 겪어도 당장의 생계유지 혹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보호가 필요함.
- 축산관련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해당 업에 종사 할 수 있음. 이는 관련업에 종사하려는 자들의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시켜 보호하고자 교육을 진행하는 것임. 위와 같은 과정 등을 참고하여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2) 「2020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정책과제

④ 청소년 취업 부당 대우 근절

-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청소년 대상 산재보험료 개인부담분에 대한 지원
 - 특수고용직의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고용자 및 피고용자(청소년) 근로교육이수 인증제 실시
 - 제안배경에 기술되어 있는 축산관련업 종사자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청소년 근로교육(근로 관련 법령, 부당대우 시 대처법 등) 진행

⑤ 청소년 취업 증빙서류 점검 강화

-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취업에 필요한 제반서류(근로계약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등) 구비 여부를 상시적(분기 단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 근로계약서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 업소를 위의 세부과제③ 청소년친화업소로 지정하여 일정 마일리지 적립 시 인센티브를 제공

1. 경제활동

1-2. 청소년의 공정한 경제생활 기반 마련

1-2-1. 청소년 경제 자립 지원 확대

청소년의 목소리

- “평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경제, 경제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야 한다.”
- “성인이 되고 나서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 “누구나 경력직을 바라는 지금, 어딘가 사회의 첫 걸음을 땀 곳이 있어야 한다.”
- “청소년의 경제 이념 확립과 경제 활동 기회를 위한 교육과 실습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

제안배경

-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경제지식의 주 습득 경로로 ‘학교 경제교육(35.1%)’과 ‘인터넷 대중 매체(52%)’를 선택하였으며, ‘학교 밖 경제교육(1.1%)’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극히 소수임.
- 서울 도봉구 힘찬병원에서는 ‘청소년 여름 인턴십’을 12회째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탐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함. 또한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담 관련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사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현장 경험의 부족, 초기 상담자가 경력을 쌓을 시설의 부족’ 등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초년생을 위한 프로그램임.
- 요즘 성인들에게도 현장 경험·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그 기회가 더욱 한정적임. 위 사례처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정책과제

⑥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 청소년 기본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연계하여 기존의 일방향적 금융교육 외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기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청소년 노동 금융교육
 - 아르바이트 플랫폼과 연계하여 아르바이트 지원 시 배너의 형태로 뜨도록 광고
 - 짧은 영상 시청 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⑦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구축

-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인턴십 우수사례를 발굴 및 보급
-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인턴십 운영 기업·기관 확대 방안 모색

2. 교육

2-1. 교육기회 다양화

2-1-1.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청소년의 목소리

- “이 시대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디지털의 발판 위에서 공부(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비대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 보충이 필요하다.”
-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전자기기 지원을 받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제안배경

- 지난해 전국에서 조사된 중학교의 75.9%, 고등학교의 66.1%에서 수학 과목 중위권 학생 수가 전년 대비 감소³⁾한 것으로 나타남. 비대면 교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중위권 학생들이 상·하위권 양쪽으로 몰리는 학력 양극화 현상이 크게 가속화되고 있음.⁴⁾ 한편 최근 질병 등 특수상황이 아니더라도 시대변화에 맞춰 디지털 교육이 교육 전반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⁵⁾
- 그러나, 통신시설의 부재 등으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청소년도 있으며, 학습 콘텐츠의 부재로 원활한 학업을 진행할 수 없는 청소년도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시흥시의 ‘거모종합사회복지관’은 온라인 수업과 소규모 모임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 및 인적자원(사람)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습플랫폼 구축, 교육콘텐츠 개발 등 비대면 수업 개선 및 디지털 교육환경으로의 변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대부분 학교 내의 청소년들에 그침. 학교 내 비대면 학습환경 대응 취약 청소년의 경우 전자기기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⁶⁾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전자기기 및

3) 2020년 코로나19 학력격차 실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

4) 코로나19 전후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서울 소재 중학교 학업성취등급 분포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21.

5) 디지털과 교육체제의 융합(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김진숙 외, 2019.

6) 대상자 223,000명, 확보 기기 대수 316,000대로 142% 규모임. * ‘온라인수업 기기 없는 학생 22만3000명...’개학 전 지급 완료”, 뉴시스, 2020. 04. 03.

인터넷 설비의 부족으로 비대면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통일된 비대면 학습콘텐츠의 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시설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1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기획재정부의 협조로 전국 공공 기관 보유 유휴 PC를 조사, 전국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523대의 태블릿 PC를 제공⁷⁾하였음. 그러나 이는 전국의 센터 수(220개소, '21)와 한 해 5만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족함. 이에 지원에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전자 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콘텐츠 개발도 필요함. 재학 청소년은 e학습터 등을 통해 무료 온라인 교육콘텐츠가 공급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검정고시 응시 등의 온라인 콘텐츠는 없는 상황임.

정책과제

⑧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 비대면 학습(활동)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자원(마을공동체,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학교 내 수업 보충 비대면 프로그램 도입
 - 학습지도 실력이 검증된 성인, 실력이 그에 준하는 학생, 퇴직 교사 인력풀 등을 자원으로 활용한 멘토단 구성 및 지원
- 지역사회 시설(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학습환경 대응 취약 청소년(도서산간 거주, 취약계층 등) 대상 디지털 학습 공간 마련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학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 평생학습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 기술과 촬영 장소, 기자재는 모두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급받아 진행 중이며, 청소년들은 필요한 경우 공공도서관 등에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경기도, 비대면 '착한교육'으로 프리랜서 강사 지원, 지역경제 활력 (간접인용)

7) 학교 밖 청소년, 온라인 학습 및 생활지원 받으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디지털 학습 환경 개선

- 다양한 주제별 디지털 기반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온라인 전환
 - 검정고시 응시 및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급여 수급권자에게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과 연계해 기기 수령, 관리, 수거 진행)

2. 교육

2-1. 교육기회 다양화

2-1-2. 범교과교육 실용성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 “모두에게 공정한 범교과교육의 기회 제공을 원합니다.”
- “현재 교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만 많은 범교과교육이 아닌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교육이 가능한 실용성 위주의 범교과 교육으로의 질적 향상을 원합니다.”

제안배경

- 범교과학습 주제는 정의에 따라 교과와의 적합성과 타당도가 검증되어야 하나, 현재의 범교과학습 주제들은 고정되어 강한 국가·사회적 요구나 학습량의 과다 등으로 인해 형식적인 교육이 추가 및 지속되고 있음.⁸⁾

- ① 안전·건강 교육 ② 인성 교육 ③ 진로 교육 ④ 민주 시민 교육 ⑤ 인권 교육 ⑥ 다문화 교육
⑦ 통일 교육 ⑧ 독도 교육 ⑨ 경제·금융 교육 ⑩ 환경·지속가능 발전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교육 영역(교육부, 2015)

- 각종 법령과 지침에서 요구하는 범교과교육 의무 이수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초등학교는 583/680시간(86%), 중학교는 310/306시간(101%), 고등학교는 310/408시간(76%)로, 흔히 일컫는 ‘국어·영어·수학’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학습 내용의 중복은 필연적이고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간과 절차를 따르느라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를 내용보다는 형식적으로 실천하기에 급급한 실정임.

미국, 독일, 일본 등의 나라만 살펴봐도 사회적 요구에 대해 학교가 반응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교과 이외의 특정 교육 내용을 일정 시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을 시수까지 따져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학교자치를 가로막고 문서에 의존하는 형식화된 교육을 유발한다.

과잉 규제가 된 범교과 교육, 정성식(한국일보 칼럼), 2021. 1. 29.

8) 교육과정 개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강현석·전호재, 2014.

- 범교과교육의 유연화와 함께 교사들의 범교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들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함. 한 교사가 범교과학습을 계획할 경우 그 교사가 지닌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범교과 학습의 범위와 깊이가 됨. 즉, 많은 교사들이 논의를 통해 범교과학습 주제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재구성할 경우 다양한 교과 지식과 가치들이 범교과 학습주제로서 활용되어 교과를 가로지르는 내용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가 활용됨. 이를 위해 범교과 지도에 있어 교사들에게 더 양질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⁹⁾.

정책과제

⑩ 학교별 편차 없는 범교과교육 프로그램 제공

- 범교과교육 공공플랫폼 마련
 - 홈페이지 형태로 범교과교육 자료를 탑재하여 교사에게는 교수학습 자료를, 학생에게는 학생 수준에 맞는 온라인 교육 제공

서울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학생 미래교육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 통합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다”라며 “올해 말 범교과학습을 시범 운영해 안정화를 지향하고 내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학부모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힘.

[사례]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원격수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에듀프레스, 2020. 7. 19.

- 지역사회와의 효과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
 - 범교과 내용에 따라 방문하거나 활용하면 좋을 지역의 기관, 장소 등을 발굴, 프로그램 마련·홍보
- 청소년이 요구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마련

9) 이윤미, 박성자, 정민경, 조현정, 임성태 외 (2021).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전북교사교육과정연구회.

2. 교육

2-2. 교육제도 공정성 확보 2-2-1. 고교학점제의 내실화

청소년의 목소리

- “지금까지 살아온 학교에서의 딱딱한 수업에서 벗어나 ‘진짜 고교학점제’가 실현되어 내가 어떤 지역에 있더라도 원하는 걸 안정적으로 배우고, 그 학습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안배경

-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작금의 일방적 교육체제를 벗어날 대안(교육부, 2021)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교육환경 전반에 잔존하는 교육격차로 인해 고교학점제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국가교육회의(2021)에 따르면 응답자¹⁰⁾의 43.6%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답하였음. 이를 반영하여 선택과목의 폭이 넓어지고 개설 요건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문제 및 학교·지역별 자원의 차이가 있어 교원 수급 및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각 단위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개설하기 어려워 학습설계권 보장에 불공정이 있음.

교총 관계자는 “대다수 교사들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추진됐을 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것”이라 말했다. …(중략)… 이들(전교조) 가운데 92.7%가 고교학점제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전면 도입 반대’는 26.9%, ‘재검토 및 개선 필요’는 65.8%에 이르렀다.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그렇기에 먼저 나서서 시범적으로 도입해봤으나, 보완할 점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기사] 교사 72% 반대한다는 고교학점제, 정부 조사서는 ‘77% 찬성’으로 둔갑(한국일보, 2021.08.10.)

10) $n = 101,214$

- 현재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대학과 연계하여 선택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율협약 혹은 대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여러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학과의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며, 단적인 교육 방식을 넘어선 체험형 교과와 수요를 기존의 전통적 교육기관이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공공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과목 수요 충족과 지역발전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앞서 언급한 국가교육회의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2.0%가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범위를 단계적·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함.
- 한편, 교육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공동교육과정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현재에는 일반고 간 혹은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¹¹⁾에만 가능하며, 일반계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급 교육기관은 공동교육과정을 지원·운영하기 위해 전문 과목을 개설할 수는 있으나 해당 학교 학생의 수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¹²⁾. 이에 일반교과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교과를 수강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음.

일반고 간 연계형	수요가 적어 단일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인근 학교가 모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일반고-특성화고 연계형	진로 변경을 원하거나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기회를 제공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형(안) (한국교육개발원, 2021)	

- 이에 교육기회의 평등 측면에서의 개선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정책을 제안함.

정책과제

⑪ 고교학점제 내 체험형 선택과목 확대

- 전국적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춰 학점이 인정되는 체험형 교과 개설 및 확대
 - 체험형 교과는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지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개설

1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II (NCS 기반 교육과정)만 가능함.

12) 인천광역시 등 일부 가능한 지역이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특목고 학생의 수강이 불가능함.

- 각 교과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지원, 마을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이를 정규교육 과정으로 인정
- 교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지역 내 전문가가 순회교사 형태로 각 교과 담당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광명형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1일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개설된 시설(학교)로 등교하여 수강하는 '공동교육의 날'에 11개 고등학교와 4개 마을교육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관별 교육과목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심리과정, ▲ 광명시미디어센터의 영상제작의 이해과정, ▲ 기형도문학관의 문예창작 입문,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의 연극의 이해 등으로,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은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연계지원 및 지역 특화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온마을캠퍼스 구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례] 광명시의 '광명형 고교학점제' 운영 (광명교육지원청, 2021)

⑫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공동교육과정의 적용 범위 확대
 - 고교학점제의 적용 범위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1176호)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고등학교급 교육기관으로 확대
-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 제공을 통한 지역별 격차 해소
 - 공공도서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배움을 나눌 수 있는 학습 공간 제공

더 저렴한 차가 더 비싼 차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면 그것이 혁신이다. 학교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쓰는 것은 구식, 대안 에너지를 쓰는 것은 혁신이다. …(중략)… 도시와 학교에 클라우드 러닝센터(Cloud Learning Center)가 필요하다. 가구, 유연성, 학생들의 사진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있어야 한다.

Yaacov Hecht (이스라엘 Hadera 민주학교 설립자), <2019 교육자치콘퍼런스> 기조강연.

인용·참고자료

- 광명교육지원청 (2021). 광명개방형 고교학점제 온마을캠퍼스 업무협약 체결.
- 한국교육개발원 (2021). 공동교육과정. 2021년 9월 22일에 인용, hscredit.kr
- 교육부 (2021).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서울: 교육부.
- 국가교육회의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참여 설문 결과. 서울: 국가교육회의.
- 김란주, 서경혜 (2018). '고교학점제'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과 정연구, 36(1), 113-138.
- 신윤범 (2020). 한국의 고교학점제 정책 동향분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39-243.
- 이현 (2018).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비평, (41), 77-14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방안 [KICE 이슈페이퍼 2018-39-11].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홍후조 (2018). 고교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699-724.
- Yaacov Hecht.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컨퍼런스" (강연). 2019년 8월 9일.

2. 교육

2-2. 교육제도 공정성 확보

2-2-2. 모두를 위한 학습평가제도 마련

청소년의 목소리

- “모두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평가제도의 마련을 원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같이 동등하게 준비를 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배경

- 2019년 교육부에서는 ‘(고교)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대학)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 사회통합전형 도입 등 대입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함. 이 발표는 입시제도의 방향성은 제시하였지만,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음.
- 현행 입시제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 등이 학생부 교과전형에 응시할 때는 ‘비교내신 환산’을 통해 내신 성적을 대체함. 비교내신은 주로 ‘검정고시 성적’을 대학 자체 환산 표에 대입해 산출하나 현행 대입에서는 각 대학마다 환산 체계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각 단위학교마다 환산 기준에 대한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 입시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응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제작해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 및 지침 미비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입시전형에 반영해 주는 대학의 비중이 적음. 2021년 청소년생활기록부 인정 대학은 6곳 (약 0.6%)에 불과함.

| 표 | 전국 대학교 수

(단위: 개, 통계청, 2020.9. 기준.)

구분	2020년				
	대학교수 (A+B+C+D)	일반대 (A)	전문대 (B)	교육대 (C)	산업대 (D)
전국	309	191	136	10	2

| 그림 | 학교 밖 지원센터 누리집

인정 대학

강릉원주대학교(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립),
서울대학교(국립), 차의과학대학교,
한경대학교(국립), 한림대학교

※ 대학별 2022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참조

- 정시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 기존 제도의 예시로는 ‘초·중등교육법 9조’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의’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제도를 들 수 있음.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연합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평가의 모의고사로, 사설 모의고사 등을 통해 소모되는 고등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2021년 현재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참여는 학교 차원뿐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결정되고 있음.

| 표 | 전국 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현황 일부 (2020. 12. 기준)

교육청 명	3월	6월	9월	11월
...				
경기도교육청	X	O	X	O
광주광역시교육청	X	O	O	O

-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학력평가의 실시 여부가 결정되면, 개별 학생은 거주 지역 혹은 재학 학교에 따라 자기평가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자연히 제도의 불공정으로 이어짐. 그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⑬ 학교 밖 청소년 학습평가 제도 개선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생부 종합/교과 전형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의 장 필요
 - 합리적인 비교내신 변환 방법, 청소년생활기록부 활용 방안 등을 논의
 - 이해관계자(학생·학부모·각 대학 입시담당자) 의견수렴·공론화 등의 절차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장기적 검토)
- ‘청소년생활기록부’ 개선 및 활성화
 - 학교생활기록부의 NEIS와 같이,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관리가 가능한 통합 서버 구축 및 운영(꿈드림센터 관리)
 -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점진적 확대 필요
 - 청소년생활기록부가 대학 입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

⑭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의 공정성 제고

-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 제공(꿈드림센터 연계)
- 학교 또는 학생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여부 자율권 부여
 - 지역 균형 및 응시 기회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성적 처리비, 문답지 인쇄·배송비등을 참여 시·도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권고¹³⁾. 또는 시행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일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

13) 현재는 ‘출제분담금’은 참여 시·도 교육청이 균등 부담하지만, ‘성적처리비’는 참여 시·도 교육청의 응시 인원에 비례하여 부담, ‘문답지 인쇄·배송비’는 각 교육청이 자체 부담하는 구조. 이에 각 교육청의 재정상황,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에 부담을 가질 여지가 존재.

3. 권리 및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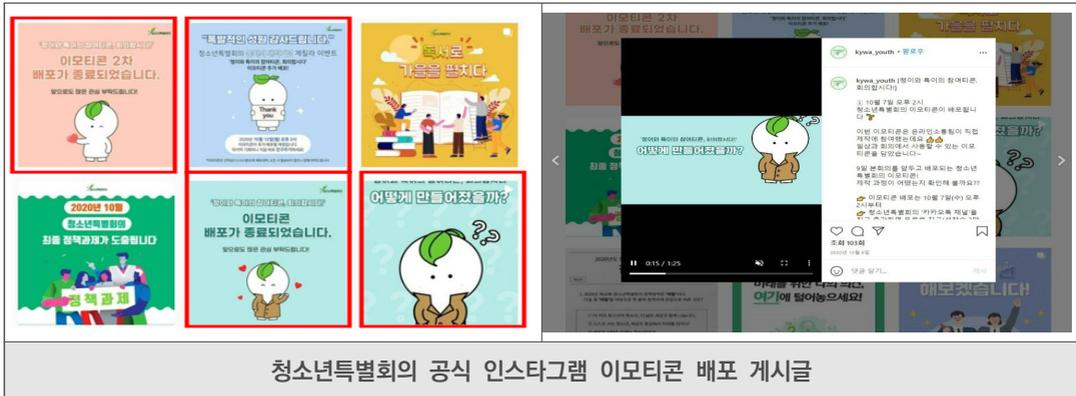
3-1. 청소년 참여권 확대
3-1-1.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제안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은 우리가 직접 온라인에서 제안하고 싶어요.”
- “청소년 또한 자신이 원하는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요.”
-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차세대 청소년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제안배경

- 청소년참여포털은 청소년참여기구 및 일반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며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만들어진 참여와 소통의 공간임.
-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포털 정책제안 Y-Change 게시판에서 2019년부터 제안된 정책은 총 323건이며, 게시물의 최고 공감 수는 70개, 최고 조회 건수는 2,290회(2021.08.25. 기준)밖에 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도 포털 이용률이 낮은 편임.
- 최근 정책제안의 참여 통로를 청소년참여기구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게 개방하고자 공모전이 추진되었으며 청소년특별회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카드뉴스 등) 또한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참여포털의 접근성은 일반 청소년에게까지 증대되지 않았음. 청소년참여기구를 제외한 다른 일부 청소년에게는 정책제안이라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함.
- 홍보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예시로는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배포한 ‘청이와 특이의 참여티콘’을 들 수 있음. 실제로 3만 명에게 이모티콘이 배포되었으며, 조기 소진으로 2차 배포가 이루어짐. 이와 같이 새로운 홍보 방안으로 참여포털의 기능 또한 홍보한다면, 청소년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함.



청소년특별회의의 공식 인스타그램 이모티콘 배포 게시물

- 청소년참여기구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또한 정책제안이 쉽게 접근 가능하다면, 조금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이 나올 것이라 생각함.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참여포털 정책 제안 기능 강화로 인해 청소년 정책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관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족스러운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함.

정책과제

⑮ 청소년참여포털 청소년 정책제안 기능 강화

- 청소년참여포털 정책제안 게시판을 통해 실현된 정책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다양한 주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영역 세분화(예시: 교육, 문화, 안전, 진로 등)
- 정책제안 게시판 게시물 중 공감 상위 3개의 과제는 청소년자치기구(청소년특별회의 등)가 검토 후 청소년 정책 관계자 등에게 전달(2달에 1번)
- 청소년 관심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매달 '이번 달 공감 수를 많이 얻은 정책' 배너 게시
- e청소년 및 청소년참여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방식 간편화(네이버, 카카오톡 등 간편 로그인 기능 추가)
- 청소년참여포털 홍보 확대
 - SNS(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스타그램 등), 학교 등 청소년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이벤트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함.

3. 권리 및 참여

3-1. 청소년 참여권 확대
3-1-2. 선거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청소년의 목소리

- “교육의 목적이자 주체인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 “청소년들의 정책은 청소년의 손으로 결정하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 “청소년들도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안배경

* 아래 내용에서 칭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에 근거해 만9세~만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함.

- 보장받지 못하는 참정권
 -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기본권임. 따라서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주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정실현의 측면에서 중요함. 교육의 수혜자인 청소년이 직접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권을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또한 현재 헌법에서는 대통령 피선거인의 연령을 만40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공직 피선거인의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 가능, 보호자 동의 없는 혼인 가능 등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이미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음.
- 이미 청소년이 참정권을 갖는 해외 사례
 - 오스트리아는 2007년에 유럽에서 가장 먼저 만 16세 선거권을 도입하여 진행 중이며, 일본에서도 선거 연령 하향 후 전과 비교해 높은 선거율을 기록함.
 - 핀란드,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부터 정치계에 입문해 빠르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총리, 대통령 등의 대표로 선출된 사례가 많음.

- 후기청소년의 정치 참여도와 관심도 증가

- 21대 총선거에서 만 18세 유권자수(약 55만명)는 전체 유권자수(약 4400만명)의 약 1.2%를 차지하였음. 선거에 참여한 만 18세 청소년의 비율은 78.5%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선거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87%의 청소년이 정치에 중간 이상의 관심이 있다고 답하였고, 64.7%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¹⁴⁾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심도가 높다는 근거가 충분하며, 따라서 선거권 연령을 확대하더라도 충분히 청소년들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정책과제

⑩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 하향
 - 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교육 영상 혹은 자료집 배포
 - 교육감 선거에 한해, 선거 연령을 점진적으로 추가 하향하여 교육의 수혜자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⑪ 피선거권 연령 하향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 하향
 -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 만 35세 이상으로 하향
 - 해당 연령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헌법 제67조 제4항의 위헌 여부 객관적 심사 후 개헌 추진

14) 「만 18세 청소년의 제 21대 총선 선거참여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재단

3. 권리 및 참여

3-2. 청소년 인권 신장
3-2-1. 청소년 인권침해 점검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 인권침해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 “우리는 이론의 확립이 아닌, 일상 속 실천이 필요합니다.”
-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 차별 없이, 특별한 우리 그대로.”
- “청소년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안배경

- 유엔아동권리협약(16.1%), 학생인권조례(7.9%), 국가인권위원회(17.6%)에 대한 인지도는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임. 가정(95.6%), 학교(91.5%), 사이버 공간(81.1%), 우리나라 전체(77.1%)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은 높은 편이며 증가하는 추세임. 전체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인권 존중 정도와 인권의식은 높은 편이며 긍정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동권리협약과 인권기구에 대한 인지도나 인권교육 경험률이 여전히 낮고 10명 중 3명 정도는 외모, 신체조건, 성차별, 연령차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¹⁵⁾
- 학교운영위원회 내 청소년 실질적 참여 필요

〈교육기본법 제5조 2항〉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청소년특별회의(2018년) 제안 정책과제 중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에 대해서 교육부 측에서는 학생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제안권 및 소위원회 참여에 대해서 ‘수용’의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 초·중등교육법상에서는 달라진 바가 없음. 여전히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학생들은 배제되어있는 상황임.

1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0.06.22.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외 32인)이 발의되어있는 상태임. 또한, 2004년도에 출범한 청소년특별회의 때에서 6차례(제1,4,6,8,10,15회) 제안되었으나, 아직도 수렴되지 않은 상태임.¹⁶⁾
-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유명무실함. 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7만4095회 개최될 동안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8727회, 11.8%에 불과했음.

정책과제

⑱ 청소년 인권침해 요소 점검 강화

- 자율적 아간자율학습 실현 등과 같은 독립적 참여선택 권리보장 및 실현상황 점검
 -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일선학교들과 연계하여 규정에 근거한 1차적 조치 필요, 학교폭력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
 - 1차(제도적 강제), 2차(자율적 권고 및 압박)을 통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학교 및 교육기관에 제재를 가하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
 -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게하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밀착형 관리 감독 체계를 확립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 개정을 통한 학생위원 구성원 및 구성 비율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주요결과를 교내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게시하는 등 활동 내용 공개 강화

⑲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대상 확대(만9~24세) 및 기능 강화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내에서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사업, 정책 등에 인권 모니터링 강화 필요

16) 한겨레, '학생에게 학운위의 문을 열라' 2021.07.19.

4. 복지

4-1. 청소년의 보편적인 복지제도 확대

4-1-1. 청소년 경제 및 정보 통합지원

청소년의 목소리

- “현재 청소년수당 관련 제도는 시군구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한 지원을 확장 및 상용화하여 공정한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복지정책을 수행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자주 바뀌는 지원 내용과 정책으로 인해 현재 시행중인 혜택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일부 청소년은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제안배경

- 청소년(만10세~18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중 경제적 이유가 57.2%¹⁷⁾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15.7%가 임금 또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지급 받았고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14.7%로 나타나 부당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생활과 직업선택에 상당한 영향¹⁸⁾을 미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은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지만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중기 청소년이 수혜를 받기 어려워 연령층이 확장될 필요를 보임.
- 대중교통별 청소년 혜택 현황이 다름을 보임.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버스 및 지하철은 만 18세 요금할인, 기차(KTX 등)는 만 24세까지 요금 할인이 이루어져 대중교통별 청소년 할인 혜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1년 8월 기준)

구분	요금할인 연령	비고
버스	만 18세	후기 청소년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지하철	만 18세	1회용 교통카드 이용시 할인 없음
기차(KTX, SRT)	만 24세	후기 청소년 할인 적용 중
기차(무궁화, 새마을)		정기승차권 60%할인 적용 ※ 일반 승차권 제외

17)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18) 「2020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법령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이 달라 이에 따른 혜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제3조 정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조의 2 청소년의 우대)
①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¹⁹⁾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선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전국 단위의 시행 가능성을 보임.
- 청소년 중 보호상담기관을 모르는 비율이 60.2%²⁰⁾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며 그 안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및 혜택들을 인지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남.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통한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청소년들이 그 정보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청소년 증명을 위해 실시된 ‘청소년증 발급’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 더불어 청소년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과정에 일부 한계를 보임.²¹⁾

1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www.gbuspb.kr

20)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1) “유명무실한 ‘공적증명서’ 청소년증”: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121408112487074#google_vignette

“국가공인 청소년증 발급률 “10%밖에...””: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390>

정책과제

⑩ 청소년수당 제도 도입

- 청소년 대상 학업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 근로장학제도 대상연령 하향
- 청소년 교통 지원제도 확대
 - 대중교통 청소년 요금 혜택 연령 확대
 - 청소년 교통비 캐쉬백 정책 지원

⑪ 청소년증을 활용한 혜택 및 정보 지원 확대

- 청소년증에 QR코드 삽입을 통한 온라인 청소년 혜택편람 제작 및 제공
- 청소년증 기능 강화

4. 복지

4-1. 청소년의 보편적인 복지제도 확대

4-1-2. 청소년 복지제도 보편화

청소년의 목소리

- “가다실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용이 적지 않아서 부담스럽습니다. 보다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이나 남성 청소년도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 “청소년 활동을 통해 자기 계발도 하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보고 싶은데 학교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다 쉽게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접하고 싶습니다.”

제안배경

- 기존 예방주사 접종 연령은 남녀 모두 만 9세~26세였지만, 최근 여성의 경우 만45세 까지 접종 연령이 늘어난 바 있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무료 예방 접종 지원이 진행 중이나, 청소년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의 보편화 및 질병 예방 차원에서 무료 접종 지원 연령층과 성별, 접종 백신의 종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²²⁾
-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은 진로 설정과 성장, 가치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청소년 단체 활동은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시 되는 사회성과 리더십/팔로워십, 인성 등의 덕목을 함양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의 청소년 활동 참여 기회와 활동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함. 따라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 받고, 서로 다른 환경으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정책과제

㉔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회균등

- 청소년활동을 교과 또는 학교활동/방과 후에 포함
 - 청소년활동 담당 교사 지원 확대, 청소년단체 소속 전문 강사 파견
 -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들이 청소년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홍보 확대

22) “가다실, 어릴수록 효과적...청소년부터 접종해야”: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05492>

“10대 청소년, 독감 발병률 높는데 안 맞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217003>

㉓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

- 청소년 대상 예방주사 접종 지원 확대
 - 남녀 청소년 구분 없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다실9) 접종 대상 확대
 - 청소년 전 연령 대상 독감 백신 접종 지원
- 청소년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4. 복지

4-2. 대상별 청소년 복지 증진

4-2-1.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의 목소리

- “지역별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편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편차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역의 청소년들이 평준화된 수준의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배경

-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청소년들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학생)들이 받는 복지와 지원, 보호 등을 동등한 수준으로 받지 못하게 됨.
-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후 기본 교과과정과 기초적인 진로·상담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함.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 지원 > 건강검진 제공 > 진학 정보 제공 및 각종 질병 치료 > 진로 탐색 체험²³⁾ 순의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나타남.
- 다양한 정책, 복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및 여건별로 그 편차가 큼.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고 ‘친구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만 교육 참여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동행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시·도 거주 청소년들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지급되는 등 청소년의 거주지역, 혹은 지자체 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0 中

23)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특히 은둔형·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현재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렵고, 관련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들을 발굴해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75.5%가 학업과 진로 탐색에 관심이 있다고 나타남.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친구들이나 부모님, 선생님과 의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0명 중 1명은 의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학업 중단 후 진로를 찾지 못한 학생이 35%로 가장 높아 학업 지원과 정보 제공 및 진로 탐색에 대한 현 지원정책의 미흡함과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현재 상담, 교육, 취업,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전국에 218개소 설치되어 있지만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 제도의 경우에도 지역 및 여건별로 그 편차가 큰 편임.
-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의 5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강화’와 3개의 세부 추진과제는 지원기관과 연계 및 강화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이 어렵고 무업,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가능성이 큼.

정책과제

- 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및 지역격차 해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 업무체계 개선
 - 표준화된 학업 지원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 내일이룸학교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별 지원 확대
- ㉕ 무업,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 지자체와 다부처의 협력을 통한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
 -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 찾아가는 상담체계 구축 및 치료형 캠프 진행
 - 학업중단 숙려제 진행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 및 정보 제공

4. 복지

4-2. 대상별 청소년 복지 증진

4-2-2.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 쉼터의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있어도, 이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쉼터가 더 많아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보호종료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배경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중점과제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청소년쉼터 전문화·특성화 및 이용 문턱을 낮추고, 주거우선의 자립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세부과제로 명시함.²⁴⁾
- 『2020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34개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32,402명의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했음.²⁵⁾ 실제 입소 청소년 대비 쉼터가 부족하여 타지역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 2020년 기준 단기·중장기쉼터를 이용했던 청소년의 57%는 귀가하였지만, 나머지 43%의 청소년들 중 경제적 자립을 이룬 경우는 3%에 지나지 않음.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 지원 공백이 발생하기에 자립지원 기관으로의 쉼터 기능 개편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함²⁶⁾.
- 현재 이를 위해 청소년·청년 대상 주택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만19세 미만 청소년은 수혜를 받기 어려움.

24)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관계부처 합동

25) 『2020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26)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2021.06.04.

구 분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만 19세 이상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인 청년 전세 평균은 6476만원, 월세 보증금 평균은 987만원으로 월30만원의 자립수당에 비해 굉장히 높음. 실제 청년 채무 발생 이유 1순위는 '주거비 마련'임²⁷⁾.

정책과제

㉞ 청소년쉼터 지원 예산 증대

- 청소년쉼터 확충 및 지원 강화
 - 시·군·구별 1곳 이상의 청소년쉼터 운영 제도화
 - 청소년쉼터 예산지원 확대
- 청소년쉼터 자립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쉼터 근로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쉼터 취업 프로그램 확대

㉟ 취약계층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주거비용 지원
 - 지방자치단체 보증제도 도입을 통한 금융 지원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지원액수 증액

2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년

5. 특별과제

5-1. 미래를 위한 생활 속 환경보호 기반 조성 5-1-1.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지원 및 새·재활용 확대

제안배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음식배달이 2019년에 비해 76.8%가 증가했으며, 이에 배달 일회용품의 사용량은 작년 대비 78%가 증가하였고, 플라스틱 폐기물 또한 13.7% 증가하였음.(한국화학연구원, 2020)
- 페트병 재활용률은 82.3%나, 페트병 쓰레기가 수거가 되기는 하지만 세척이 안 되어 있거나 분리가 안 되어있어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음.(환경부, 2019) 이는 가정 등에서 재활용 분류를 해서 배출을 하더라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섞여 오염이 발생하게 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 등도 함께 버리기 때문임.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재분류를 진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인적자원의 소모가 발생함.
-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간단한 분리수거를 통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로봇, 빈 용기 반환수집소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방법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분리수거 할 뿐 아니라 재활용한 쓰레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참여자들이 돌려받음으로써 자원의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음.



28) 삼척시 보도자료, 삼척시, '재활용품 버리고 돈도 벌고!' 인공지능 캔·페트병 회수 로봇 설치 추진, 2020.02.14.
29)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asns/221608349879>

- 서울새활용플라자³⁰⁾는 새활용(업사이클링)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새활용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새활용 제품 제작,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음. 플라스틱 방앗간³¹⁾은 재활용할 수 없는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쇄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여 튜브짜개, 벽걸이용 훅 등으로 제작하고 있음. 자원순환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업, 단체 등의 기존 사례를 활용하여 쓰레기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

정책과제

- ㉘ 일회용품 분리수거 지원을 위한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확대
 - 페트병의 경우, 산책로나 관광지 등 생수병 구매 빈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함.
 - 배달용기와 빈병의 경우, 주택단지나 아파트 등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 설치
- ㉙ 새·재활용 활동 기관(단체) 지원 및 홍보 강화
 - 서울새활용플라자, 플라스틱 방앗간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쉽게 새·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홍보 강화
 - 청소년수련시설 내 새·재활용 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확대

30)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 <http://www.seoulup.or.kr/>

31) 플라스틱방앗간 홈페이지: <https://ppseoul.com/mill>

5. 특별과제

5-1. 미래를 위한 생활 속 환경보호 기반 조성 5-1-2.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배치 확대

제안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인천광역시 등 여러 기관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를 운영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을 위해 개인 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³²⁾
-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뉴욕대(NYU) 랭건의료센터의 병리·미생물학과 임상교수인 필립 티에노 박사는 텀블러 등 물병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세균을 배양하는 이른바 ‘페트리접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³³⁾
- 여러 기관에서 개인 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가 개인 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미비함.
- 조달청에 등록된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는 컵을 거꾸로 잡고 누르면 10초간 살균수로 간편하게 텀블러를 살균·세척할 수 있는 기계임.³⁴⁾ 세척의 번거로움 및 텀블러의 안전성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실제 국회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인 컵 자동 세척기’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에 6대를 설치하였음.³⁵⁾
- 청소년의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 컵 사용을 위해 청소년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에 지원 기반 설치가 필요함.

32) 일회용품 없는 인천시청 ‘환경특별시 인천’시대 막 올려, 인천광역시청, 2021.02.01

33) “텀블러 대충 닦으면 ‘세균 배양 접시’나 마찬가지” 美 전문가, 윤태희, 서울신문, 2019.10.10

34) 개인 텀블러(컵) 자동 살균 세척기, 주식회사 워터제네시스, 조달청 혁신제품 전용물

35) 1회용컵은 이제 그만! 다회용컵 사용해요, 국회사무처, 2021.09.30

정책과제

㉔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배치

- 청소년수련시설 개인 컵 자동 세척기 배치
- 학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점차적인 확대 배치
 - 기관별 혁신제품 구매예산(혁신구매 목표제) 활용
 - 설치 희망 민간기관의 경우, 구매 예산 일부 지원

4

소관부처 검토의견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① 청소년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대상 청소년 창업 우수사례 등을 토대로 청소년 창업 관련 박람회, 교육 세미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창업동아리 활성화와 창업 체험 교육 활동 나눔을 위한 축제의 장인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운영('15~, 교육부) - 청소년들의 창업 도전 의식을 고취하고 범국민적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창업유망팀300 경진대회 운영('16~, 교육부) ※ 2021 산학협력 EXPO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학생 창업 페스티벌) • 중소기업부는 '청소년 비즈쿨'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체험 활동 등 창업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지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 또한 연 1회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모의 창업캠프 및 멘토링을 통한 '새싹기업 IR 발표대회', 앱 관련 창업 경진대회인 '스마틴앱챌린지'(SK플래닛 협업)를 운영, 청소년 창업 인식개선을 시행 중 	교육부, 중소기업부
② 청소년의 취·창업 기회 지원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창업 실태 조사 진행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부는 효과적인 창업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매월 업종·연령·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20대 청년창업이 활발한 상황 - 다만, 동 조사를 20세 미만의 청소년(10대)까지 확대하는 것은 통계 분석의 어려움(분석 시간 과다), 10대 창업 수요 등을 고려 시 실효성이 낮음 • 청소년(만15세~24세) 취·창업 준비 시 금융지원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만15세~24세)만을 위한 별도의 창업자금 지원은 없으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창업하는 자(예비 창업자)*에게 '청년전용창업자금(융자)'을 지원 중 * '예비 창업자'는 대출약정 체결 시점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대출 실행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이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를 위한 정책자금이므로, 청소년(만15세~24세)의 경우에도 활용 가능 • 계획서 평가와 면접 및 발표 후,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예시: 청년창업지원금) 지원 (부분 수용) -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 과거 창업경험이 없는 20대 청년(만 29세 이하)에게 '생애 최초 청년창업 전용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천만원, 1년 미만 초기 창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 지원 - 또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경연(도전 K-스타트업)을 통해 우수 아이템을 포상하고, 통합본선·왕중왕전 진출팀에게는 창업사업화 지원(자금), 기술보증*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융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서 발급(기술평가, 보증수수료 면제) 	
<p>③ 청소년 친화 기업 지정 확대</p>	<p>불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 지원 관련 청소년 친화기업 지정 및 인센티브 지급 - 고용부가 선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층이 희망하는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친화적인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심사하여 매년 선정하고 있음(청년 만 18세~34세, 유효기간 매년 1.1~12.31) -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친화 기업 지정은 ① 이미 만 18세~34세 청년이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②만 15세~18세 청소년이 근로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고, ③이러한 소수의 기업 중 '근로환경 쾌적'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의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 ④청소년의 취창업 지원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므로 동 정책과제는 수용하기 어려움 - 향후,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p>고용노동부</p>
<p>④ 청소년 취업 부담 대우 근절</p>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청소년 대상 산재보험료 개인부담분에 대한 지원 (불수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에 따라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법규 사항을 부담 대우 항목으로 포함하여 정책과제로 진행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p>고용노동부</p>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행복일터 운영(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착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장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 추진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파악 2) 사업장에 대하여 청소년 고용 시 준수사항* 안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치해야 할 서류,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3)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행복일터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고용가능업소, 최저임금 시행, 근로시간 준수, 근로서류 작성 등 4) 사업장 정보 관리를 통한 밀착 상담 진행, 행복일터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배포 계획 중 - 최근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20%;">2018년</th> <th style="width: 20%;">2019년</th> <th style="width: 20%;">2020년</th> <th style="width: 20%;">2021.10월</th> </tr> </thead> <tbody> <tr> <td>청소년 행복일터</td> <td>15,772건 (발굴 949건)</td> <td>29,500건 (발굴 2,357건)</td> <td>7,329건 (발굴 1,030건)</td> <td>6,503건 (발굴 1,137건)</td> </tr> </tbody> </table>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10월	청소년 행복일터	15,772건 (발굴 949건)	29,500건 (발굴 2,357건)	7,329건 (발굴 1,030건)	6,503건 (발굴 1,137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10월									
청소년 행복일터	15,772건 (발굴 949건)	29,500건 (발굴 2,357건)	7,329건 (발굴 1,030건)	6,503건 (발굴 1,137건)									
⑥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노동 금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도 4/4분기 중 아르바이트 플랫폼과 연계 통한 교육홍보 추진 -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활용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 관심 증대를 위해 플랫폼 내 배너 광고 추진 	고용노동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기본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여 금융교육 실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초등 4학년~중등 3학년 / 교육방법 : 교재, 보드게임, 카드게임 활용한 진행 • 장소 : 청소년수련시설 / 강사 : 대학생 봉사단 / 교육기간 : 8회차 (주1회, 매회 2시간) - 전국에 있는 금융체험시설(체험관, 박물관 등)을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배포해 왔으며, 올해 말 개정판 발간 예정 • 금융회사별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33개 기관, 77개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학생은 물론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도 포함한 「금융교육 체험 가이드북」을 확대·개편 제작예정 ('체험관 지도'를 추가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 	금융감독원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개별 금융회사가 결연을 맺고, 금융회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는「1사1교 금융교육」을 운영 중 -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 기간에 적합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실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식과 진로탐색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8회차로 구성 / 서울,경기,부산,충남 등 전국 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 / 매 회차별 보드게임, 카드게임 등을 교구교육을 포함시켜 적극적 참여 유도 - 수능이후 고3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중이며, 관련 교육영상도 제작하여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3학생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유익한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법, 재무관리방법, 금융꿀팁 등으로 구성 (총 2시간 분량) • 금감원이 교육을 신청한 학교와 교육이 가능한 인근 금융회사 등을 연결해 주고, 학교와 금융회사 등이 교육일자를 협의한 후 수능일('21.11.18) 이후부터 교육 실시 * 신청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제작한 금융교육 동영상과 강의안을 제공 -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이 교재, 보드게임, 동영상, 웹툰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으며, 동 홈페이지에서 금융체험시설 검색과 「1사1교 금융교육」, 수능이후 고3 금융교실 등 신청 가능 	
⑦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구축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일 경험 프로그램 구축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직무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직무체험 참여 기업·기관 확대 방안 모색 * 근로자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인턴십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탐방 등으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을 하는 사업임 - (추진현황) '17년부터 만15세~34세 미취업 청년 10,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10,492명 → ('18) 10,229명 → ('19) 10,119명 → ('20) 7,804명 → ('21.10월말) 7,763명 - ('22년 계획) 만 15세~34세 미취업청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으로 개편(1만명, 예산30억→50억 증액) 	고용노동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p>※ 교육부는 유사 제도로 산학협력 기반의 인력 양성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생 대상 ‘산학연계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사례도 함께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인턴십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협회(KACE)*와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 표준 현장실습 운영 우수사례 발굴·보급 추진(’22) * KACE: <u>K</u>orea <u>A</u>ssociation for <u>C</u>ooperative & <u>W</u>ork-<u>I</u>ntegrated <u>E</u>ducation ● 청소년 인턴십 운영 기업·기관 확대 방안 모색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참여를 통해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 활용하여 가점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수 확대(1 → 11개) 및 금리우대 등 혜택 지원 등 참여기업 유인 지속 확대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마련발표(관계부처 합동, ’21.10.13.)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인턴십 운영 기업·기관 확대 방안 모색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십 참여 사업장 확대 추진 	여성가족부
<p>⑧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 비대면 학습(활동) 지원 강화</p>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의견 수렴 결과 서울·충남·경남 등은 수용, 경기·대구·세종 등은 부분수용, 광주·전북 등은 불수용으로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학생중심 교육도서관의 변화를 위한 교육도서관 리모델링 중장기 계획 수립 시 학생의 요구를 통한 공간 재구조화 방안에 반영 여부 검토 예정 - (세종) 학습지원을 위한 멘토단 운영은 향후 교육기부 플랫폼을 구성하여 자원봉사가 가능한 인력 확보와 수요자(학생)를 매칭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전북) 학교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비대면학습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대면식 체험활동이나 마을교사를 정규 수업에 코·티칭 인력으로 활용한 대면 수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참여 및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됨. 	시·도교육청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p>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디지털 학습 환경 개선</p>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주제별 디지털 기반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연령·진로미결정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추진 •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급여 수급권자에게 스마트 기기 무상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기관 등과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지원 추진 	여성가족부																																				
<p>⑩ 학교별 편차 없는 범교과교육 프로그램 제공</p>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교과교육 공공플랫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보 통합지원 포털(에듀넷·티-클리어)에 다양한 범교과 학습 주제 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탑재 및 보급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정보 통합지원 포털의 범교과 학습주제별 자료 탑재 및 활용 현황 <table border="1" data-bbox="498 973 1136 1235"> <thead> <tr> <th>학습 주제</th> <th>안전 건강</th> <th>진로</th> <th>민주 시민</th> <th>인권</th> <th>다문화</th> <th>통일</th> <th>독도</th> <th>경제 금융</th> <th>환경지속 가능발전</th> <th>인성</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자료 (건)</td> <td>262</td> <td>142</td> <td>103</td> <td>185</td> <td>143</td> <td>91</td> <td>134</td> <td>50</td> <td>158</td> <td>158</td> <td>1,426</td> </tr> <tr> <td>활용 (회)</td> <td>19,652</td> <td>11,510</td> <td>8,040</td> <td>8,296</td> <td>8,747</td> <td>7,450</td> <td>25,372</td> <td>3,768</td> <td>9,407</td> <td>32,369</td> <td>134,61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의 효과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청소년이 요구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의견 수렴 결과 경기·세종·충남 등은 수용, 경남·울산·전북 등은 부분수용, 광주·제주·경북 등은 불수용 등으로 검토함. - (세종) 각 범교과학습 주제별로 관련된 지역사회기관을 발굴하여 협력체계를 구축(MOU체결)해나가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과 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충남)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학교 여건 검토를 통해 학교별로 '학교자율특색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지원하여 범교과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학습 주제	안전 건강	진로	민주 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 금융	환경지속 가능발전	인성	계	자료 (건)	262	142	103	185	143	91	134	50	158	158	1,426	활용 (회)	19,652	11,510	8,040	8,296	8,747	7,450	25,372	3,768	9,407	32,369	134,611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습 주제	안전 건강	진로	민주 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 금융	환경지속 가능발전	인성	계																												
자료 (건)	262	142	103	185	143	91	134	50	158	158	1,426																												
활용 (회)	19,652	11,510	8,040	8,296	8,747	7,450	25,372	3,768	9,407	32,369	134,611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p>⑪ 고교학점제 내 체험형 선택과목 확대</p>	<p>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내 체험형 선택과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및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에 대하여 인근 학교 등과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대학·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과목을 개설·운영 중임 *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21) : 온라인 1,331개, 오프라인 3,602개 등 총 4,933개 과목 개설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 사업 참여 기관 현황 : 광역·기초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사회 단체, 지역 병원 등 총 312개 기관 - 또한,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한 '학교 밖 교육' 운영 및 학점 인정을 위해 시도 공통 지침*을 마련('21.12)하고, 시도교육청 별로 학교 밖 교육기관·프로그램 발굴('22~)을 통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 * 주요 내용 :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기관 요건, 교육 장소, 인정 학점 등 	<p>교육부</p>
<p>⑫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p>	<p>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교육과정의 적용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에도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적용 범위의 제한은 없으며, 공동교육과정 수강 및 이수 인정 등에 대해서는 학교가 정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교과목을 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 (주요 근거) 「초·중등교육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등 •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 제공을 통한 지역별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교과교실제' 등 시설 사업을 지원 중에 있으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2024년까지 전체 일반계고에 학점제형 공간 구축을 지원 예정임 ※ 2021년 현재까지 일반계고등학교의 약 45%(1,680교 중 756교)에 대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완료 - 지역 사회가 보유한 교육활동 시설 인프라 활용은 현재에도 해당 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자체 계획 수립에 따라 활용 가능함 	<p>교육부</p>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⑬ 학교 밖 청소년 학습평가 제도 개선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점진적 확대 필요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20.5)하고 학생부가 없는 학교밖 청소년과 국외고교 출신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을 개발·배포하였으며 - 대입에서의 형평성·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대입전형자료 중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식 변경 등에 대해 소관 부처(여성가족부)와 추가 논의 필요 ● 청소년생활기록부가 대학 입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 1항(입학전형자료)에 따라 대학은 고등학교 학생부, 수능 성적, 대학별 고사(논술·면접)의 성적,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에 해당하는 다양한 자료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령 개정 불필요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생활기록부 개선 및 활성화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시·도 광역단위별 참여대학 단계적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4개 대학 → '21년 6개 대학 - 청소년생활기록부의 대학 입시 활용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 등은 예산 확보 및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필요 	여성가족부
⑭ 전국연합학력 평가 응시 기회의 공정성 제고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연합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향상, 진로진학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함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시험장소 제공 및 응시원서 접수 등 실시간 시험실시 및 관리 사항을 꿈드림센터와 연계하는 것은 17개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사전에 검토되어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전국 단위의 시험의 경우, 평가의 신뢰성을 위해 문답지 사전 관리와 시험일 부정행위 예방 및 감독에 대한 철저한 관리 능력과 의무가 가능한 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답지 상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이중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사전 유출 예방 * 듣기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방송 시설 사전 점검 및 당일 관리 철저 * 부정행위 예방 및 시험 감독 철저 	서울특별시 교육청, 여성가족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다음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문제지 탑재: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http://www.gsat.re.kr)에 실시간으로 문제지를 탑재하며, 학생은 비로그인 접속으로 문제지 내려받기 가능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 정답 및 해설, 성적 통계 제공: 시행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 및 해설 탑재, 성적 처리 후 통계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지원 - 청소년센터에 문제지, OMR 답안지, 정답 및 해설 배송(시험 당일, 시험 종료 직전 제공):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친구랑 센터를 통해 문제지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는 성적 발표 시 제공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 향후 추진 시 여성가족부-교육부(교육청) 협의 예정 	
<p>⑮ 청소년 참여포털 청소년 정책제안 기능 강화</p>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포털 내 청소년 정책제안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포털 유지보수를 통해 정책영역 세분화 및 배너 게시 등 추진 예정이며, 향후 청소년특별회의를 거쳐 정책영역 분류 및 선정을 검토하겠음 - 또한, 정책제안 게시판 게시글 중 공감 상위 3개의 과제를 정기적으로 제안 및 검토하는 일정을 추진하며, 청소년특별회의 온라인소통팀의 역할 활성화 등을 통해 청소년참여포털 홍보를 확대하겠음. 	여성가족부
<p>⑯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p>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선거 선거연령 만16세 이상으로 하향 (입법정책적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 연령은 각 국가의 정치환경이나 문화적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 - 교육감선거에 한해 선거연령 만16세로 하향하는 법 개정 여부는 교육감선거의 특수성, 우리의 정치문화, 국민여론,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 • 학생 대상 교육감 선거 관련 교육영상 및 자료집 배포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교육감선거 내용을 포함한 선거교육 콘텐츠(교재, 동영상, e-book 등) 제작 및 전국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센터 등에 배부·안내 완료 - 2021년 8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해당 콘텐츠 안내 및 적극 활용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⑰ 피선거권 연령 하향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선거 피선거권 연령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부분수용, 입법정책적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직의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국민의 정치의식과 교육수준, 정치문화 및 선거풍토,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정개특위 등 국회 회의 시, 위원회 입장 전달 예정 ※ 피선거권을 만20세(윤준병 발의), 만18세(장경태, 이은주 발의)로 개정하는 법안 국회 계류 중 ●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만35세 이상으로 하향 (불수용, 입법정책적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67조를 개정하여야 함. - 헌법개정은 헌법 제128조·제130조에 의하여 국회·대통령이 제안 또는 의결하므로, 그 추진여부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⑱ 청소년 인권침해 요소 점검 강화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독립적 참여선택 권리보장 및 실현상황 점검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단위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시도교육청에 있으며, 현재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학교규칙 모니터링을 실시, 학생의 인권침해적 요소 개정 노력 중('18~) -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생,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으로 '22년 상반기 보급 예정 - 시도교육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해 시도교육청별 학교규칙 모니터링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우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정비해 나갈 예정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의 법적근거 마련,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강득구, '20.6.22 / 강민정 '21.8.24)의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 중 ※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21.6.3) 개최 및 국민생각함 설문조사('21.7.12~8.1)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주요결과 공개 강화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교육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공립학교는 학교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중 - 향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파악 시 회의록 비공개 현황 등 조사를 통하여 공개 강화 	
<p>①9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p>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당사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모니터링 주제에 따라 필요시 모니터링단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당사자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국가인권위원회
<p>②0 청소년수당 제도 도입</p>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의 대상연령을 청소년으로 하향하고, 청소년 수혜자 확대 필요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다양한 취업경험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자금 부담없이 학업을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업(연령 제한 없음)임 - 제안사항은 대학 재학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시, 별도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청소년 교통 지원제도 확대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중교통 요금관련 사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며, 각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 중 • 청소년수당 도입(중장기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청소년수당 관련 제도가 각기 운영되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에 따른 정책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시 해당 과제에 대해 검토하겠음 • 청소년 학습지원 바우처 도입(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는 현재 유사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맞춤형 학습클리닉 등 학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을 통한 청소년부모 본인 및 자녀의 학습·생활도움 지원* 예정('22년~)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사람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p>	<p>교육부</p> <hr/> <p>국토교통부</p> <hr/> <p>여성가족부</p>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⑳ 청소년증을 활용한 혜택 및 정보 지원 확대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증 기능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신분확인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해 도입('03.10)이후,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17. 1), 온라인** 재발급('18.7)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기능 확대 지속 추진 중 * 해당 연령에 대한 확인을 통해 수송시설,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혜택 적용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활용 - 청소년 수당 지급, 교통·식사비 지원 등 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 추진 시 청소년증을 연계·활용하도록 지자체·교육청 등에 협조 요청하는 등 기능 및 혜택 확대 지속 추진 예정 - 아울러,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①지자체, 교육부(청), 학교, 청소년 유관 기관·시설 등 연계 홍보 및 ②청소년 친화적인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카카오톡플러스친구,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홍보) 등 지속 추진 예정 ※ 청소년증에 QR코드 삽입 등은 시행령 등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여성가족부
㉑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회 균등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활동을 교과 또는 학교활동/방과 후에 포함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배려, 민주시민 등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 소양을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통합적으로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으며, - 창의적 체험활동*,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등 학생의 희망과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청소년 활동이 가능하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등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 **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활동 - 현재 청소년활동은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운영 중이며, 학생의 자율적인 희망에 따라 청소년활동에 참여함 	교육부
㉒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들이 청소년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홍보 확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홍보 추진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예방주사 접종 지원 확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중고생(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 질병관리청은 예산부처(기재부)와 협의하여,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접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질병관리청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p>* ('17-'18절기)생후6개월~59개월 → ('18-'19절기)생후6개월~만 12세 → ('20-'21절기)생후6개월~만18세 → ('21-'22절기)생후 6개월~만13세(중1)</p> <p>- 향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p> <hr/> <p>• 남녀 청소년 구분 없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다실9) 접종대상자 확대</p> <p>1) 여아청소년 접종대상자 확대 (수용)</p> <p>- 2016년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만 12세 여아 대상 HPV 백신(2가, 4가) 2회 접종 지원하던 것을, 2022년부터 만 13~17세 여아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추가확대 지원할 예정임</p> <p>*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p> <p>2) 남아청소년 접종 대상자 확대 및 HPV 9가 백신 도입(중장기검토)</p> <p>- HPV 국가예방접종 남아 확대 및 HPV 9가 백신 도입에 대한 비용-효과성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해당 연구 결과에 따라 HPV 국가예방접종에 남아 확대 및 HPV 9가 백신 도입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p> <p>* 「HPV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2021.1월~2023.1월)</p>	
<p>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및 지역격차 해소</p>	<p>수용</p>	<p>•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업무체계 개선</p> <p>-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 균질성 확보를 위해 업무 매뉴얼, 실무자 직무교육, 컨설팅 등 추진</p> <p>• 표준화된 학업지원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p> <p>-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매뉴얼, 진로동기강화 프로그램, 표준화된 학업지원 프로그램(학습클리닉 등) 제작 및 배포</p> <p>• 내일이룸학교 프로그램 지원 강화</p> <p>- 사회적응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강화 및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실시</p> <p>•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별 지원 확대</p> <p>- 전국 센터 서비스 균질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배포</p> <p>- 민·관자원 연계로 농어촌지역 청소년 지원</p> <p>*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연계 장학금 지급 및 청소년 도서지원, 자녀안심재단 연계 농어촌 꿈드림센터 공부방 꾸밈사업 지원, 한국관광공사 연계 농어촌지역 청소년 대상 서울관광 지원 등 추진</p>	<p>여성가족부</p>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⑫ 무업,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숙려제 진행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및 정보제공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숙려제 참여 후 복귀율이 83.5%임을 고려할 때, 숙려제 참여자 정보를 센터에 연계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상담, 복지지원, 기초학력증진, 진로상담 및 체험, 대안교육, 관계회복, 문화활동, 여행 등 - 또한, 학업중단 학생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안내하고 해당 학생의 정보를 연계하고 있는 바, 숙려제 참여자의 정보연계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육부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다부처의 협력을 통한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연계·발굴 추진 중 - 의무교육(초·중)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시행 -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안전망 내 기관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설치 확대 * ('21) 14개소 → ('22) 20개소(+6)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확대 * ('21) 238개소 → ('22) 240개소(+2)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상담체계 구축 및 치료형 캠프 진행(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청소년상담사) 배치 확대 * ('21) 1,354명 → ('22) 1,363명(+9)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대면상담이 어려울 경우 전화상담 및 온라인 상담 지원, 지역 내 청소년 동반자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상담 지원 - 인터넷 과의존, 정서·행동 등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치유기관(캠프)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추진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②⑥ 청소년쉼터 지원 예산 증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확충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22년 5개소 청소년 쉼터 확충 예정 * ('20) 133개소→('21) 134개소 →('22년 계획) 139개소 - '22년 청소년쉼터 예산지원 지속 확대 예정 * ('20) 17,952백만원 →('21) 19,556백만원 →('22년 정부안) 22,314 백만원(증2,758백만원) ● 청소년쉼터 자립 지원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부터 '쉼터 입·퇴소 청소년이 국가장학금(II유형) 우선 선발대상, 청년도전사업의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취업 시 특례 대상에 포함 예정(교육부·고용부 협업) 	여성가족부
②⑦ 취약계층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지원액수 증액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보증금 지원액수 상향은 추가 용자지출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건전성, 전세시장 안정여부,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및 구직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 지원 기준 완화 및 지급기간 확대 노력 * 기준완화 : 직전 입소기간 1년 → 폐지 또는 6개월 * 지급기간 : 3년 → 5년 - 퇴소청소년 대상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입주 지원('19.7월~), LH 건설임대주택까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확대('21.10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노력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②⑧ 일회용품 분리수거 지원을 위한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확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빈병을 회수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 소비자 반환 편의 제공을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2019년기준 103대),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 ● 또한, 지자체단체에서 지능형 플라스틱 전용수거함 제작 필요성, 효과성, 제작시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부담을 등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 후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용기를 보급 중 ● 다만,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치단체에 처리책무를 부여하고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관련하여 전국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능형 플라스틱 수거함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를 통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지역화폐, 모바일쿠폰, 종량제봉투 등)를 제공 중임 	
<p>㉔ 새·재활용 활동 기관(단체) 지원 및 홍보 강화</p>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하여 경제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업사이클 센터 설치사업' 추진('13년~, 총 9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구, 인천, 서울, 경기, 순천, 청주, 전주, 제주, 천안 • 업사이클제품 판로 개척, 홍보 등 '업사이클 기업 지원사업' 추진 ('19년~, 매년 2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기준 (설치사업) 계속사업 1개소(천안) 신규사업 1개소(대구) 지원, (기업지원) 3개센터(서울·경기·대구) 지원 예정 	환경부
<p>㉕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배치</p>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배치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내용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를 배치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며, 특정회사의 제품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어 수용이 곤란함. • 다중이용시설로 개인 컵 자동살균세척기 확대 배치(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는 1회용 컵 등 사회 전반의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을 유도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고자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시행('21.7.26.) 하였으며, -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사 내 각 층별 '개인텀블러(컵) 자동살균세척기' 설치 완료 ('21.1.1, 조달청 혁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부처·산하 공공기관의 실천 유도를 위해 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시책 추진상황 국무회의 구두보고('21.7.6.) - 다만, 청소년수련시설·학교·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개인 텀블러(컵) 자동살균세척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우며, 각 기관의 관심과 유관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p>여성가족부</p> <hr/> <p>환경부</p>

제 4 장

붙임자료

1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정책영역 발굴 및 결과

- 정책의제: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 전체 청소년위원의 의제 선정 투표(2020.7.1.~.6.)로 선정
- 정책과제 발굴 결과: 총 33개 과제 중 32개 과제 수용(96.9%)

분 야	정책 과제	계	수용		불수용
			수용	부분 수용	
계		33	6	26	1
취업	전국민 대상 청소년 취업 친화 환경 조성	6	1	5	-
정보	청소년 자립 교육 프로그램 기반 구축	4	1	3	-
	청소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3	1	2	-
보호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5	-	5	-
	청소년 자립에 대한 기반 마련	3	2	1	-
경제	청소년 현실경제 기반 마련	4	-	3	1
	경제·금융 인식 및 이해의 연속성 제고	3	1	2	-
특별과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대응방향	5	-	5	-

이행현황 모니터링 개요

●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추진 과정

'20. 2. 25.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기본계획 수립
'20. 5. 18.~24.	정책영역 선정 온라인 투표 진행 - 정책영역 선정 결과 '자립'
'20. 5. 29.	출범식 : 청소년위원 위촉, 출범선언 등 - 정책의제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20. 7~10월	정책과제 관련 지역회의 및 일반청소년 의견수렴
'20. 9. 11.	정책발굴워크숍 : 정책과제 체계화 및 구체화 작업 등
'20. 10. 9.	본회의 : 정부부처에 상정할 정책과제 도출 및 전체위원 대상 의결투표
'20. 10월~11월	정책과제 관계부처 협의
'20. 12. 4.	결과보고회: 33개 세부정책과제 제안
'20. 10월	2020년 정책과제 이행여부 모니터링 조사(선배위원(OB) 자문단)

● 이행현황 모니터링 결과: 총 32개 과제 중 27개 과제 이행(84.4%)

분야	정책과제	계	이행		미이행	불수용
			이행	부분이행		
계		33	13	14	5	1
취업	전국민 대상 청소년 취업 친화 환경 조성	6	2	3	1	-
정보	청소년 자립 교육 프로그램 기반 구축	4	2	2	-	-
	청소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3	2	1	-	-
보호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5	2	3	-	-
	청소년 자립에 대한 기반 마련	3	2	1	-	-
경제	청소년 현실경제 기반 마련	4	-	2	1	1
	경제·금융 인식 및 이해의 연속성 제고	3	2	-	1	-
특별과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대응방향	5	1	2	2	-

● 이행현황 모니터링 세부결과표

분야	정책과제	소관 부처	수용 여부	이행 여부
1. 취업	① 맞춤형 멘토(기관)-멘티(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이행
	② 후기청소년 인턴 및 실습 지원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③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취·창업 동아리 네트 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④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공동 취·창업 동아리 공모사업 활성화	시·도 교육청	부분수용	부분이행
	⑤ 청소년 직업윤리 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미이행
	⑥ 청소년 근로 관련 부정적 인식 개선(광고, 교육)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2. 정보	⑦ 교육지원청 주관 직업(진로)체험 확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부분수용	이행
	⑧ 직업체험 업무협약을 통한 진로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시·도 교육청	부분수용	부분이행
	⑨ 학교 교육과정에 자립교육 의무화	교육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⑩ 청소년 자립 필수정보 파악 및 교육 프로그램 조성	교육부	수용	이행
	⑪ 청소년 자립 지원 정보제공 포털 구축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⑫ 청소년 자립 지원 홍보물 제작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이행
	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홍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수용	이행
3. 보호	⑭ 사용자 대상 청소년 노동권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⑮ 현장 실습 지원 고등학교 대상 안전 관리 강화	교육부	부분수용	이행
	⑯ 특성화고 현장실습 환경 개선	교육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⑰ 근로 청소년 피해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이행
	⑱ 근로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⑲ 지역사회 청소년시설(꿈드림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수용	부분이행
	⑳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수용	이행
	㉑ 보호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보건복지부	부분수용	이행

분야	정책과제	소관 부처	수용 여부	이행 여부
4. 경제	㉒ 후기청소년 전·월세 대출 기준 완화 및 확대지원	금융위원회	부분수용	부분이행
	㉓ 청년 주거복지 정책자료 확대보급	국토교통부	부분수용	미이행
	㉔ '청소년키움통장(가칭)' 개설	보건복지부	불수용	-
	㉕ 청소년 수당 지급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㉖ 정규 교육과정 내 '금융(실물경제)' 개설 및 의무교육 실시	교육부	부분수용	미이행
	㉗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㉘ 대학생 금융교육 및 금융교육 선순환 제도 마련	금융위원회	부분수용	이행
5. 특별 과제	㉙ 한국형 police diversion(경찰선도프로그램) 도입	경찰청	부분수용	미이행
	㉚ 중재 협의 및 민간 투자형 선도 프로그램 도입	경찰청	부분수용	미이행
	㉛ 스토킹 방지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법무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㉜ 학교폭력 내 스토킹 처벌 강화 및 교육 실시	교육부	부분수용	이행
	㉝ SNS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보호체계 확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2

2020년 정책과제 및 모니터링 결과 세부내용

1

취업

1-1. 전 국민 대상 청소년 취업 친화 환경 조성

1-1-1. 청소년-기관 취업 연계 확대

청소년의 목소리

- “고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만 열중하여 정작 본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가 힘들고, 수박 겉핥기식인 직업체험 등의 실효성 부족한 활동으로 인해 적성과 직업이 연계성을 찾는 이해가 부족한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 및 청년들이 기회를 얻도록 해야합니다.”

제안배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실습생 개개인의 적성 및 흥미에 따라 실습 장소가 배정된 경우가 52.9%에 불과함.³⁶⁾
- 통계청³⁷⁾에 따르면 15세부터 24세의 2020년 2분기 실업률은 11.9%로 2020년 1분기 11%, 2019년 4분기 8.5%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잡코리아에 따르면³⁸⁾ 국내 중소기업 중 54.6%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힘.

36)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승경, 2018.

3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

38) 중소기업 54.6% '인력 부족하다!', 잡코리아, 2020.07.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하여 15세~29세의 청년이 고용지원을 받고 있음. 하지만 2020년 2/4분기 15세~24세 실업률은 11.9%, 25세~29세 실업률은 9.0%³⁹⁾로 후기청소년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정규 교육 이수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으로, 모든 청소년이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기존 단기간만 운영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간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직업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 2017년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진로 멘토링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였지만, 모니터링 결과⁴⁰⁾ 일부 지역 이행에 그쳤음.

정책과제

① 맞춤형 멘토(기관)-멘티(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의 적성과 진로 희망에 맞춰 기관과 연계 지원: 기관(멘토)-청소년(멘티)
 - 후기청소년(만18세 이상) 대상
 - 중소기업 중심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원 운영,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기관 신청(희망 직종 및 적성 기재 후 신청)을 받아 연계
 - 분기별로 진행하며 중복 직종 2회, 최대 3회까지 가능(횟수 제한-기회의 형평성)
 - 청소년의 꿈에 맞는 컨설팅활동, 스터디 등 진행

3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

40) 2018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8.

② 후기청소년 인턴 및 실습 지원

-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주관 청소년 인턴 및 실습 프로그램 진행
 - 후기청소년(만18세 이상) 대상
 -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의 자원 활용 인턴 및 실습 프로그램 진행
 - 정부 차원 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후기청소년 의무 참여 권장
 - 상/하반기로 진행하며, 참여 횟수 제한 규정 마련
 - 정부차원의 실습 및 인턴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지급

모니터링 결과

① 맞춤형 멘토(기관)-멘티(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이행>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내 활동을 살펴 보면, 직업·학과·학습멘토링 등 다양한 기관, 대학교 등에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지원(꿈드림센터 꿈드림멘토, 여성가족부 1388청소년지원단 등)도 진행하고 있음. 다만 다양한 기업에서 청소년 맞춤형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였음.

② 후기청소년 인턴 및 실습 지원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지역별 직업체험지원센터, 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초·고등학생, 전환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등에서 기업·공기관 등 일터에 현장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

1-1. 전 국민 대상 청소년 취업 친화 환경 조성

1-1-2. 교내·외 취·창업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의 목소리

- “동아리를 통해서 청소년이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진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주체적인 취·창업 동아리들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때 청소년의 온전한 자립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동아리는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 관련 동아리 활성화도 좋지만, 미래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될 수 있는 취·창업 동아리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배경

-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청소년이 활동의 주체로서 운영되는 자치적인 조직체이며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적절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고 체계를 결정해 주기도 함.⁴¹⁾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⁴²⁾에 따르면 동아리활동의 참여가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의 태도와 부분적으로 진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됨.
- 2015 교육과정⁴³⁾에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사항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을 동아리활동과 연계하여 편성·운영할 것을 권장할 만큼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예술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2018년부터 2년간 동아리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진행했음. 2년간 261개 동아리가 지원받았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참여동아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청소년 진로 관련 동아리가 각광받으며 동아리는 활발해지고 있지만, 관련 기반이 미비하기에 본 정책을 제안함.

41)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권준근, 2011.

42)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정은·정혜원, 2019.02.

43) 2015 개정 초·중·고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정책과제

- ③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취·창업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기관(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등)에 동아리연합회 구성 권고 후 공문과 고시를 통한 자율적 참여 유도
 - 지역 내 연속성 있는 교류 및 타 지역 간의 교류 활동 진행
 - 지역 사회 멘토와 교내·외 취·창업동아리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강연 및 포럼 개최 지원
- ④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공동 취·창업 동아리 공모사업 활성화
 - 매년 마을공동체 및 학교, 수련시설 대상 취·창업 동아리 공모사업 진행
 - 공모사업 참여시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유망 산업 관련 취·창업동아리에 가산점 부여
 - 공모 선정 동아리는 예산 지원 확대

모니터링 결과

- ③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취·창업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이행>
 - 청소년어울림·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지원기준(중점육성 동아리 발굴 권장)에 '진로·직업(취·창업) 역량개발 관련 동아리지원' 내용 신설하였으며, 서울시(시립보라매 청소년센터 주관), 부산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서 취·창업 동아리 관련 사업을 지원하였음.
- ④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공동 취·창업 동아리 공모사업 활성화 <시·도 교육청, 부분이행>
 -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중소기업벤처부, 교육부) 등 청소년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축제, 공모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⁴⁴⁾⁴⁵⁾ 가산점에 대한 부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 청소년 취업과 관련된 교육, 지원제도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취업 동아리 공모사업 등 취업 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

44) 온라인 청소년 창업 축제 열린다, e대학저널, 2021.05.23.

45) 청소년 창업 축제에서 자신의 끼를 펼쳐라!,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2021.11.02.

1-1. 전 국민 대상 청소년 취업 친화 환경 조성

1-1-3. 청소년 직업 인식 개선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된다면 청소년 부당대우도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중소기업은 좋지 않다.’ 사회적 인식이 사회에 퍼져있습니다. 이는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배경

- 통계청⁴⁶⁾에 따르면 15세부터 24세의 2020년 2분기 실업률은 11.9%로 2020년 1분기 11%, 2019년 4분기 8.5%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증가하는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중 약 54.6%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음.⁴⁷⁾
-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취업준비생에게 가장 필요한 취업 자질로 ‘직업윤리’를 선택했음. 이는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음.
- 경상남도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⁴⁸⁾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 개선분야 중 하나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⁴⁹⁾ 실제 ‘왜 공부 대신 일을 하는 거지?’라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져있음.

정책과제

- ⑤ 청소년 직업윤리 교육 확대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의 ‘직업윤리’부분 교육 강화
 - 직업 차별 인식 개선 교육 강화
 - 대학 일자리센터 주관 직업 차별 교육 실시

4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

47) 중소기업 54.6% ‘인력 부족하다!’, 잡코리아, 2020.07.

48) 2019년 경상남도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경상남도, 2019.

49) 청소년들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높은 필요성 가져”, 오마이뉴스 윤성호, 2019.09.06

2

정보

2-1. 청소년 자립교육 프로그램 기반 구축

2-1-1.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매우 다양함에 반해, 학교에서 지원하는 진로프로그램의 경우 학교를 기점으로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 적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만든 선택지 내에서 선택해야 해서 원하는 선택지가 없을 수 있고, 희망하는 선택지가 있더라도 정원이 한정된 경우가 많아서 진로프로그램을 수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안배경

- 진로교육법 제4조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현재의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는 초중고 재학생 이외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통계를 찾기 어려움.
- 세종시 교육청의 동네방네프로젝트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도 한 사례가 될 수 있음. 동네방네프로젝트의 경우 불특정연령대와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 1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개설된 방과후 형식의 강좌를 한 학교가 아닌 관내 모든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자기주도적 진로체험활동을 위해 ‘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예산 계획까지 작성함으로써 스스로 원하는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꿈의 대학은 기존의 학교 주관 진로 강좌와는 달리 시 단위로 대학 학과 체험 강좌를 개설하여 청소년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음. 다만, 꿈의 대학은 직업보다 대학 학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경기도 교육청-‘경기 꿈의 대학’ 운영개요〉

구분	주요내용
기간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각 8주간 운영
시간	주중(월요일~금요일) 19시~21시, 주말(토요일) 10시~12시에 수강
차시	강좌 당 주1회 2차시(8주차는 3차시) 8주, 총 17차시(학기당) 운영
대상	고등학생 전(全)학년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무학년제 운영)
비용	무료수강 원칙(실험실습비 또는 재료비의 경우 자비 부담 발생 가능)
수강	한 학기 1인 3강좌까지 수강 가능
강사	기관이 인증한 석사 이상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기록	✓ 별도 평가는 없으며, 강좌 당 70% 이상 출석한 경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정책과제

⑦ 교육지원청 주관 직업(진로)체험 확대

- 기존의 학교 단위의 진로프로그램에서 시군구 단위의 진로프로그램으로 확대
-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 만 13세~18세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진로프로그램 계획

⑧ 직업체험 업무협약을 통한 진로프로그램 제공

- 교육지원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직접적인 체험 위주의 진로프로그램 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등과의 직업 체험 업무협약을 통한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2-1. 청소년 자립교육 프로그램 기반 구축

2-1-2. 학교 내 자립교육 프로그램 조성

청소년의 목소리

-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부분 청소년은 단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을 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짊어지게 될 사회에 필요한 정보,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는 없는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 자립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로 및 부동산 계약 등에 있어서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배경

- 자립교육 대상자 제한 조치
 -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립교육을 하고 있음. 110분이 6차시로 나뉘져 있으며, 보호종료아동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 중 하나임.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아동이나 청소년은 들을 수 없음.
 - 경상북도 포항시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자립 생활교육실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 또한 대상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에게만 해당함. 아울러 정작 일반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자립교육은 진행하지 않음.
- 자립에 대한 불안감

연령대	내용	%
15~29세 (가구수[가구]: 875)	전혀 자립하지 못함	6.9
	별로 자립하지 못함	15.4
	보통	22.2
	약간 자립	23.0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32.5
	모르겠음	0.1
합계		100.0

- 위 표는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 자립정도」를 나타낸 통계표임.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라는 '불안감'을 갖지 않은 사람 이외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875개의 가구 중 67.6%인 591개 가구임. 10명 중 6명이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음.

● 자립 정보 부족으로 생긴 피해

- 2018년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657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작년 최저시급인 7천530원 미만을 받았다고 답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61.6%에 달하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임. 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함. 2년마다 실시되는 이 조사는 2016년 조사보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비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 초과근무 요구 및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비율이 모두 상승했음. 이를 통해 청소년 대상 청소년 근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알 수 있음.
- 2019년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일대에서 원룸 16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A씨가 대학생 120여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이 벌어짐⁵⁰⁾. 이와 유사한 대학생 대상 부동산 계약사기는 매년 꾸준히 일어남.

● 기존 교육의 비효율성

- 교육부가 2019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관련 수업 운영 현황(2018.3월~2019.2월)에 의하면 1년간 서울지역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수업 학교급별 평균 교육시행 시간은 고등학교 5.7시간(총 1,813시간), 초등학교 3.9시간(총 2,381시간), 중학교 3시간(총 1,142시간) 순으로 노동인권 교육 수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해 지루함 및 재미없음(38.6%), (2순위)교육 내용의 반복(27.5%)등을 응답하여, 교육내용에 변화가 필요함.

50) 대학생 원룸 보증금 39억원, 외제차·도박·해외여행에 탕진한 임대업자, 중앙일보 한영혜, 2019.11.07.

정책과제

⑨ 학교 교육과정에 자립교육 의무화

- 자립 프로그램 기획하기 전,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자립 교육을 진행한 후, 자립 프로그램 기획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구조로 진행
- 자립 프로그램 직접 기획
 - ‘미래의 나는 어떻게 자립했을까?’라는 얘기를 담아, 계획 플랜과 미래 모습 상상하며 ‘자립을 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희망을 키워주는 것으로 목표 설정
- 자립 청소년의 심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립 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⑩ 청소년 자립 필수정보 파악 및 교육 프로그램 조성

-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데 필요하거나 유용한 정보파악을 위해 청소년, 사회인 대상 설문 조사 시행 * 설문조사 진행 기관 : 교육부
(예시) 부동산 계약, 소비자 보호, 청소년 근로계약, 세금, 청년 정책, 국가 건강검진 등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를 나누어 분야별 필수정보를 교육할 프로그램 조성, 이론보단 실례를 바탕으로 내용 구성
 - * 교육 프로그램 조성 기관: 교육부
 - * 교육 프로그램 자문 기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 실효성 있는 교육 진행을 위해 교사의 교육 이수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 지양, 담당 강사의 방문 강의 시행
- 학기 말 혹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후 등 학사운영이 비교적 여유로운 시기에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효과 제고
- 교육 진행 후에도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부처에 대한 홍보 필요

모니터링 결과

⑨ 학교 교육과정에 자립교육 의무화 <교육부, 부분이행>

- 기술·가정, 과학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과 연계한 자립교육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재량으로 운영

⑩ 청소년 자립 필수정보 파악 및 교육 프로그램 조성 <교육부, 이행>

- 청소년 자립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지원 확대
 - 예: 서울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 자립 지원 및 정보 제공 강화
 - 부산시청소년자립지원관 개관('21년 10월) 등 지속적 자립 지원 확대 중

2-2. 청소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2-2-1. 청소년 자립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청소년의 목소리

-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뉴스가 간혹 보도됩니다. 주위에 청소년들이 택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계약 및 근로를 할 때 사용자와 어떠한 체결을 해야 하는지 등 청소년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청소년이 자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안배경

- 청소년 참여기구를 포함한 청소년 활동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미비
 -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최저시급인 7천530원 미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이 34.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61.6%,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은 42%로 청소년 알바에 대한 부당 대우가 많았고, 특히 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의 다수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알 수 있음.
- 봉사활동신청 및 확인 홈페이지의 경우도 다양하게 나뉘어 있음. 또한 신청방법과 인터페이스 나이스 연계 방법까지 달라(1365, 두볼, VMS 등) 이에 대한 혼동이 있음.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통합된 플랫폼이 존재 하지 않음.
- 청소년활동 / 교육 / 봉사활동 등 다양한 정보들이 한곳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음. (시청/교육청/각 지역 청소년센터 홈페이지/각 지역 청소년관련 기관)
- e-청소년은 현재 봉사활동 및 활동적 정책에 대해서만 다루지고 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_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_1)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2016)’를 보면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라는 사실이 21%임. 즉, 10명 중 일부인 2.1명만 자료를 제공받은 것을 알 수 있음.

응답자유형별	2016	
	아니다	그렇다
전체	79	21
성별		
남자	78.3	21.7
여자	79.9	20.1
학교유형별		
초등학교	74.7	25.3
중학교	78.9	21.1
고등학교		
전체	82.4	17.6
일반계고	82.2	17.8
특성화계고	83.1	16.9
지역규모별		
대도시	76.4	23.6
중소도시	80.6	19.4
읍면지역	81.8	18.2

가족유형별		
양부모가정	79	21
한부모가정	82.5	17.5
조손가정	71	29
기타	71.7	28.3
학업성적별		
상	75.9	24.1
중	80.1	19.9
하	81.5	18.5
경제적수준별		
상	77.1	22.9
중	81.2	18.8
하	81.6	18.4

응답자유형별(1)	응답자유형별(2)	2019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전체	소계	52.8	36.4	8.6	2.2		
성별	남자	56.0	33.6	8.3	2.1		
	여자	49.4	39.3	9.0	2.3		
학교급	초등학교	51.1	37.0	10.2	1.7		
	중학교	54.9	36.3	7.3	1.4		
	고등학교	52.5	35.8	8.3	3.4		
교육유형	일반계고	51.9	35.7	8.6	3.7		
	특성화계고	54.8	36.1	7.2	1.9		
지역규모	대도시	52.0	36.9	8.9	2.2		
	중소도시	54.9	35.5	8.1	1.6		
	읍면지역	47.4	38.0	9.9	4.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52.6	36.7	8.5	2.2		
	한부모가정	57.1	31.0	9.7	2.3		
	조손가정	50.2	34.0	12.5	3.4		
	기타	41.4	49.7	8.8	0.0		
학업성적	상	50.5	36.2	10.5	2.8		
	중	51.6	38.4	8.0	2.0		
	하	58.6	32.9	6.7	1.8		
경제적 수준	상	50.4	37.9	9.6	2.2		
	중	56.1	34.7	7.0	2.2		
	하	56.1	32.9	8.5	2.5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_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에서 ‘참여기구를 들어본 적 있는가?’라는 응답률을 보면 52%가 ‘듣지 못했다’라고 응답하였음. 10명 중에 5.2명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2019 전국 청소년 지표 기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20,648명 중 7,535명, 즉 10명 중 3명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였음.

구분	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전체
	전체평균 (5점)	전혀 알지 못한다 (1점)	잘 알지 못한다 (2점)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점)	잘 알고 있다 (4점)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전국	2.77	2,038명 (9.9%)	5,497명 (26.6%)	9,354명 (45.3%)	2,796명 (13.5%)	963명 (4.7%)	20,648명 (10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2019 전국 청소년 지표 기초조사 보고서」

정책과제

⑪ 청소년 자립 지원 정보제공 포털 구축

-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기초적인, 구체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정책 및 서비스의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도 해당되는 법률들(「노동법」 등)의 내용이 수정, 변경됐을 때 포털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 청소년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Q&A 시스템을 운영함.
- 청소년이 근로계약과 같은 청소년 노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근로계약서의 개념과 필요성, 최대 근로시간과 가산수당의 계산법 등)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

⑫ 청소년 자립 지원 홍보물 제작

- 청소년에게 친근한 플랫폼(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
-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한 자립 지원 팸플릿을 제작함. 자립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와 청소년이 갖는 노동권의 내용과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대처 방법 등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팸플릿을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들에게 배포함.
- 또한 중학교(13-15세)를 입학하는 시기에 청소년증과 함께 청소년 권리 팸플릿을 나눠 주어 청소년으로서 필요한 정보(권리, 봉사활동)들을 포함한 지원 팸플릿을 제작하여 스스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홍보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알지만,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근로계약서는 필수사항이다.’라는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함.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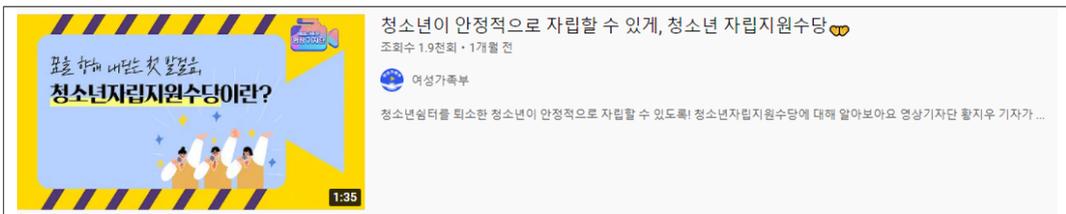
⑪ 청소년 자립 지원 정보제공 포털 구축 <고용노동부, 부분이행>

- 청소년 자립을 위한 근로권익 정보 제공
 - 근로기준법 안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 등을 통한 청소년 지원
 - 근로계약서, 보호자 동의서 양식 등 제공 중



⑫ 청소년 자립 지원 홍보물 제작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이행>

-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노동법 상식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예: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법 기본 상식 홍보자료 배포
-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지원 홍보
 - 예: 여성가족부 유튜브 플랫폼 청소년자립지원수당 홍보 등



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홍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이행>

- 청소년 노동권리 인식 향상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행복일터 캠페인, 청소년근로조건알리미 운영 등 근로 계약서 의무 작성 안내 및 교육

3-1.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3-1-1.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청소년의 목소리

- “근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는지, 사용자는 무엇을 지켜줘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근로 청소년과 그를 고용하는 사용자 모두 노동권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안배경

- 낮은 노동권 교육 비율과 열악한 청소년 노동 환경
 -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교 학생 중 절반에 달하는 47.8%는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학생 중 35.3%는 그냥 참고 일했으며 26.4%는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60% 이상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교육청, 노동인권 상담 기관 등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비율은 10%에 그치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39.8%에 불과하고 또한 근로 청소년과 같은 경우 범죄에 취약한 경우가 많음.
 -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 직원의 사례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만 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본인의 주장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본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피해 사실에 대한 대응,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
 - 근로 청소년들은 본인에게 피해 사실이 있어도 당장의 생계유지, 혹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 성희롱과 같은 경우 증거 수집이 필수적인데 그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아 피해 사실에 대응하는 처벌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음.

● 특성학교 현장실습 중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

연번	학교명	학생명	발생일시	사고 내역	조치사항
1	D공고	홍○○	2013.08.26	타일 샘플절단기 롤러에 의한 뼈에 금, 인대 늘어남	회사에서 공상처리 급여, 치료비 지급
2	K공고	박○○	2013.08.30	트럭에서 하차 시 팔 골절상	회사에서 치료비 전액 부담 휴무기간 동안 급여 지급
3	I고	이○○	2013.10.14	포장기계에 의한 손가락 절상	회사에서 치료비 부담
4	B고	서○○	2013.10.04	기계 협착에 의한 손가락 골절	회사에서 치료비 부담
5	H고	김○○	2013.12.24	원자재 운반 시 손가락 절상	산재처리 치료비 전액 보상
6	K고	조○○	2013.12.15	청소 중 손가락 골절상	산재처리 추가 비용 회사에서 부담
7	S고	신○○	2014.01.21	출장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및 보상

- 위와 같이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도 만 17살인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에 기계를 정비하던 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사고도 있음. 특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강화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이런 사고를 예방함.

정책과제

⑭ 사용자 대상 청소년 노동권 교육 실시

-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교육 확대(사용자, 청소년)
 - 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권 교육 진행
 - 교육: 지방자치단체
 -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동 (혹은 여성가족부 단일)
 - 세부 방안: “교육이수서” 발급; 교육이수서가 있어야 노동자(기존 청소년 한정 대 상에서 오히려 청소년의 고용을 비활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체 노동자 계층으로 확대 적용) 고용 가능
 - 상담 기관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홍보 확대
 - 기타 사항: 청소년에게도 요구되는 노동권 관련 교육 시 해당 부서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

- 현재 노동권과 관련된 교육은 학교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청소년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교육 자료 제작
 - 교육 : 지방자치단체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공동,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의 협업이 필요함.
 - 기타 사항 : “교육이수서” 발급; 교육이수서가 있어야 노동 가능
(근로 기간 14일 이상, 근로 시간 10시간 이상에 해당함, 사용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함)

⑮ 현장 실습 지원 고등학교 대상 안전 관리 강화

- 청소년 근로 환경 중 안전사고가 잦은 편에 속하는 고등학교 현장 실습은, 인명 피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어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습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행동 요령을 포괄한 교육 자료를 제작 및 배포
 - 자료제작: 고용노동부 / 배포: 교육부
- 현장 실습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사후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담당 교사 및 현장 책임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설(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와 유사)

모니터링 결과

- ⑭ 사용자 대상 청소년 노동권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부분이행>⁵¹⁾⁵²⁾⁵³⁾
 -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2019년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3개 → 4개 권역)하고,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대폭 확대하였음.
 - 더불어 2020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청소년 상담 수요를 고려하여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상담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오후 9시 이후에는 1388

51)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한 동인권교육 확대한다.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및 대응방향' 발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1.28.

52)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로 부당 처우 바로잡는다.- 3월부터 카카오톡 통해 학교별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2.10.

53)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보호해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9.30.

청소년상담전화 등 연계 서비스 안내를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노동교육 방식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강도가 늘면서 온라인 교육도 31.5%로 2018년보다 (16.7%)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며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고용노동부 위탁)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소년 노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자료 확인 가능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청소년노동인권 동영상 콘텐츠 게시되어있음.
- ‘교육이수서’ 관련 정책은 현재 시행 중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관련법령 無)

⑮ 현장 실습 지원 고등학교 대상 안전 관리 강화 <교육부, 이행>⁵⁴⁾

- 순회지도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실제 실습이 실습협약과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현장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저해할 요인이 발견되는 등 정상적인 실습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습을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등에 근로감독 요청 등 조치 실행 중

<p>① 위반 내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초과, 휴일·야간 근로 확인(벌칙) • 현장실습계약 미체결 또는 표준협약서 미사용(과태료) <p>학교(담당교사)</p>	<p>② 복교 및 시정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 확인 즉시 복교조치 및 위반사항 기업통보 • (과태료) 확인 즉시 시정요청요청 불수용 시 학생 복교조치 <p>학교(담당교사)</p>	<p>③ 근로감독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위반사항 통보 근로감독 요청(실습생 위반내용 등 상세화) • (성)폭력 등 위중사항은 관할경찰서 수사의뢰 동시 진행 <p>사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p>
<p>④ 사안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 요청 상황 및 근로감독 회신 결과 등 사안보고 <p>사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p>	<p>⑤ 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 결과 벌칙 해당 사업장은 관할 경찰청에 고발 <p>사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p>	<p>⑥ 사후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조치 사후보고 - 수사한 경우 수사 결과 - 법원 최종 판결 결과 <p>사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p>

표준협약 위반 시 조치 절차(2020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안전사고 발생 시 실습학생은 적기에 치료를 받고 보고하며, 학교 및 교육청은 현황을 파악하여 상급기관 보고 및 학생지원 실시 중(실습장의 책임자와 학교장, 담임교사 및 현장실습 담당교사는 교육청과 함께 해당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상급 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함)

54) 2020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교육부, 2020.3.1.

3-1.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3-1-2. 청소년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에 있어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 중 가장 기본적인 안전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노동 환경에 있지만, 근로 중에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신고 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쉽게 이러한 피해들을 상담 받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최근 현장실습 현장에서 안전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가장 기본적인 안전권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배경

-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안전 관리자 배치 문제
 - 최근 특성화고등학교 실습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발생 원인으로 안전 관리자의 부재 및 관리의 부실 문제가 대두됨(2017년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사망사고, 2014년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부당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
 -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후기 청소년들 중 37.6% 만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함.
 -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3세~24세)의 31%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청소년 3명 중 한 명은 먼저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요일이나 시간에 초과근무를 요구받는 등 상당히 많은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에서는 근로 중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전국 4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담을 진행 중임.

- 청소년이 상담을 요청하면, 현장 면담 후 사업자와 중재를 시도하며, 중재 후에도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 부당한 처우 문제와 근로권익 침해 상담은 지난해 5만여 건으로 2018년 3만282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함.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 인권교육도 진행 중임.

정책과제

⑩ 특성화고 현장실습 환경 개선

- 특성화고 현장실습 환경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소홀하지는 않는지, 현장실습 환경이 적절한 안전 기준을 통과했는지 등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정기적으로 협조하여 공동 조사
- 국가 차원의 일자리 개선 및 안전관리자 배치 관리 강화와 확대
 - 기존 실습현장 안전관리자에 더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방안과 안전관리자 배치를 통한 안전관리체계의 강화.
- 민간, 공기업 등 사업체에서는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 관리자가 각 노동 현장에 배치되어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또한, 관리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인원을 확대하여 각 사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⑪ 근로 청소년 피해 지원 확대

- 근로계약서 작성 모니터링
 - 근로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는지, 근로계약서를 근로 청소년에게 교부하였는지 등을 시군구에서 일정 주기로(월 1회 수준) 모니터링을 진행함.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확대 및 학교와의 연계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보호 센터가 더 많은 청소년들을 원활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 산하의 지역센터를 두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이나 정보 획득의 접근성을 위해 '학교 및 꿈드림센터'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연계함. 각 학교별로 마련된 '위클래스'와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간

협업 인프라 구축으로 '위클래스'의 경우 문제상황 발생 시 근로보호센터로 이첩하여 보다 원활한 해결이 가능토록 하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경우 관련 간행물 및 청소년 근로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위클래스에 비치토록 함.

(현재 노동 유관기관과의 소통은 있는 상태이나, 매뉴얼 혹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다소 소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중앙을 포함하여 총 4곳의 지부를 가지고 있음. 직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방문이 어려울 경우 지원의 효력이 떨어짐. 이에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의 추가 설치 혹은 지역 청소년센터 등과의 협업 인프라를 구성하여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이 근로에 대해 보다 밀접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⑱ 근로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 생겨난 신조어로, 청소년에게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특히 생계형 근로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어려움을 함께 겪을 수 있음. 이에 따라 근로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함.

-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연계성 강화 및 프로그램 검사 제공
- 우울감과, 무기력증 등 정신건강과 연관된 기분장애에 대해 조기에 발견 및 치유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청소년 심리상담센터를 각 학교, 나아가 기관 등에 속해 있는 청소년과 연계.
- 연 1회 이상 전체 학생 대상 심리 검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노동 관련 정신 건강을 검진하고, 위험 수준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전문적 상담을 진행하여, 정신 건강을 증진토록 노력함.

모니터링 결과

⑬ 특성화고 현장실습 환경 개선 <교육부, 부분이행>⁵⁵⁾⁵⁶⁾

-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초까지 '산업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안전 미흡요소 발견 시 즉시 복교조치와 더불어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에 연계의뢰 할 계획.
- 교육부에서도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 예정임.
-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실습 환경 안전기준 통과 여부 등 조사 예정.

⑭ 근로 청소년 피해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이행>

- 여성가족부 소관과 유선문의 결과, 전국 4개 권역에 소재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 보호센터는 추가설치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추가 설치 계획이 있으며, 학교 및 청소년 유관기관 간 연계는 현재 이뤄지고 있음, 또한 꿈드림센터에 근로 청소년들이 많아 특히 연계 빈도가 많다고 함.

⑮ 근로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여성가족부 소관과 유선문의 결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청소년들의 우울감(코로나블루)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근로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 진행중임.
- 하지만 청소년의 노동관련 정신건강 검진 대상을 전체 청소년으로 설정하여 제안되어있어 연1회 검진 여부 확인 불가하며,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적으로 시행중이지는 않음.

55)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 실시 :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의 사망 사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블로그, 2021.10.28.

56)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조기 실시, 교육부 보도자료, 2021.10.20.

3-2. 청소년 자립에 대한 기반 마련

3-2-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 “학교 밖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7~18세 학교 밖 청소년은 추산 약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출, 성범죄 등 비행과 학업 중단 및 가정폭력 등’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자퇴 전후로 유일한 연계 프로그램인 ‘학업속려제’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이후 어떠한 기관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보입니다.”

제안배경

- 2019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0.6%(16,422명), 중학교 0.7%(9,129명), 고등학교 1.5%(24,506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매년 약 5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이중 6%인 약 3,000명의 학생들이 비행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추산 70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학교를 대신하여 “보건 및 교육,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꿈드림센터의 이용률은 겨우 4만 8천여명 뿐임.

정책과제

- ⑰ 지역사회 청소년시설(꿈드림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시스템 구축
 - 자퇴 이후 ‘정원 외 관리대상’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학교 차원에서 지원(정원 외 관리 대상 정보 보관 기간 중).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 내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의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이 센터 내에서 학업 영역부터 생활 내 필수적인 영역까지 지원하여 금전적 열악함을 보완토록 함.

모니터링 결과

⑬ 지역사회 청소년시설(꿈드림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여성가족부 소관과 유선문의 결과,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정보를 꿈드림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하는 점에서 꿈드림 또는 청소년 유관기관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 정보제공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있음.

3-2. 청소년 자립에 대한 기반 마련

3-2-2.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립을 하기 어렵습니다. 나이도 나이일뿐더러,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고, 보호자가 지원해주야,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 “현재 충남에서도 해마다 100명 정도의 18세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되어 시설 밖으로 나오고 있지만 경제관념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소액의 자립지원금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배경

- 보육원에서 자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함.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액의 자립지원금을 받기는 하지만 거친 세상을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음. 실제로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자란 청년들조차도 취업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청소년 보호법과 다양한 법률로 만 18세는 아직 보호를 받을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핸드폰 개통, 아르바이트, 등 사회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 함. 하지만,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은 보호자 동의서를 받지 못해 경제활동 및 활동을 못하는 상황임.
- 보호종료청소년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만 18살 이상이 된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자립 정착금’이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게 지급됨.

| 표 | 시도별 1인당 자립정착금 지원액(2015년)

단위:만원 / 자료:보건복지부(20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500	500	300	500	400	300	500	500	50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0	500	500	300	300	500	500	500	

정책과제

㉔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보호종료청소년은 아동 보호 시설에서 퇴소 후 지자체 자립지원금을 한 번에 수령함. 청소년들은 시설에서의 퇴소가 곧 자립이라는 생각으로 생활의 규칙 상실과 무절제한 소비 등의 모습이 많이 보이며 범죄에 노출이 높아짐.
- 이를 방지하기 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시기의 청소년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 종료 이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의 공동 협조를 통해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사후 관리 지원.

㉕ 보호 시설 퇴소 연령 상향

- 보호 시설 종료 청소년들의 '18세 퇴소' 기준은 현재 청소년 스스로 사회에 발을 내딛고 생계를 유지하며, 미래를 꿈꾸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함. 최근에는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등 자립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현실과 비교하면, 시설청소년의 보호종료 시점이 현실적이지 않음.
- 청소년보호법과 다양한 법률로 만 18세는 아직 보호를 받을 청소년이라는 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은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해 경제활동 및 활동을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퇴소 청소년의 연령을 현재 만 18세에서 높이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함.

모니터링 결과

㉓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이행>

- 보호종료청소년의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 마련 중.
- 지역자원과의 연계로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244곳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하는데,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와 검사 등을 추진
-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을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며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추진

보호종료아동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제도 변경사항 안내

- 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보호연장 강화: 만 18세 + 6 → 만 24세 + 6
 - 미성년육간제도 보완: 공공유연인 제도 도입
- 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자립지원상담기관 운영: 일부(5개 시도) → 전국(17개 시도)
 - 전담인력 확충: 국비지원 0명 → 120명 배치
- 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립수당 지급확대: 보호종료 3년 → 5년
 - 아동 자산형성 지원 확대: 정부 매칭비율 1:1 → 정부 매칭비율 1:2, 정부 지원한도 5만원 → 10만원
 - 공공주택 지원 강화: 추가특입 8개월 전부터 추가 상당 설계 지원, 공공임대 공급지원 확대, 보호연장아동 입주대상 포함
 - 주거비 등 사례관리 지원 확대: 10개 시도 377명 → 17개 시도 1,000명 이상
- 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 진로 진학: 진로상담 플랫폼 연계, 대학진학 기회확대, 국가장학금 기숙사 지원강화
 - 취업 훈련: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기업 지원유형 지원강화
 - 자립역량: 자립세미나프로그램 시행사업 확대, 자립지원 생보제공 강화
- 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 심리지원 사업 확대: 심리상담·치료제할 지원사업 확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멘토링 지원
 -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1개 모임 → 6개 모임, 30명 → 120명 이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종료 연령 만18세→24세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㉔ 보호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보건복지부, 이행>

-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중에 있음.
-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임.

4

경제

4-1. 청소년 현실경제 기반 마련

4-1-1. 후기 청소년 주거 안전성 확대

청소년의 목소리

-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기숙사와 함께 자취방을 알아보았으나, 대학생이 혼자 보증금과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후기 청소년들이 이러한 주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배경

-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전세
 - 보증 대상자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7천만원
- 후기 청소년 전월세 자금 마련의 어려움
 -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인구특성별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에 따르면 1인 청년 전세 평균은 6,476만원, 월세 보증금 평균은 987만원으로 나타남. 대부분은 부모님께 빌리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목돈을 구함. 이마저도 힘든 일부 청년들은 보증금 부담이 적은 고시원에서 주거를 시작하기도 함. 일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시도해 보았지만, 까다로운 대출 조건이 가장 큰 벽이라고 토로함.

정책과제

㉔ 후기청소년 전·월세 대출 기준 완화 및 확대지원

-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용 지원정책의 기준 완화와 확대지원
 - 보증 대상자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연령 하향
 - 해당 정책으로 주거지를 구하는 후기 청소년들이 최소 전세 8000만원 이상의 주거지를 구할 수 있도록 확대지원
- (예시) 보증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전세’ 기준)

㉕ 청년 주거복지 정책자료 확대보급

- 관공서 및 중개업 등에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후기 청소년 및 청년 복지 정책 자료 보급
- (후기) 청소년 거주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노력 지속

모니터링 결과

㉔ 후기청소년 전·월세 대출 기준 완화 및 확대지원 <금융위원회, 부분이행>

- 제안배경에 명시되어 있는 보증한도, 최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음. 하지만 보증 대상자를 민법상 성인 기준으로 하는 만 19세에 대한 연령 하향은 이루어지지 않음.⁵⁷⁾



청년전세

보증 대상자 :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보증한도 : 최대 1억원

청년전세 보증대상자 및 보증한도 내용(한국주택금융공사)

57) '청년·신혼부부 위한 '40년 초장기모기지' 내달 1일 도입, 파이낸셜 신문, 2021.06.21.

㉓ 청년 주거복지 정책자료 확대보급 <국토교통부, 마이행>

- 관공서 및 중개업 등에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정책자료 보급은 확인되지 않으나,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다음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청소년의 주거권에 대한 위협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계층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청소년 거주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경향신문>

애들은 가라? 청소년 부모에게 집을 '허하라'

기사입력 2021.08.28. 오전 11:33 최종수정 2021.08.28. 오전 11:35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쿠키뉴스>

청소년 '외출타기 삶'...아동주거권 어디에

안세진  / 기사승인 : 2020-10-06 06:05:01

4-1. 청소년 현실경제 기반 마련

4-1-2. 청소년 소득보장 정책 마련

청소년의 목소리

- “‘청년저축계좌’ 정책을 보면서 비슷한 정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다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후기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여 청소년 복지정책, 특히 청소년 수당 정책이 보편적으로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 “청소년기에 소득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소득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이를 통해 복지 정책의 혜택을 제공해준다면 청소년들의 근로생활에서 부당한 일도 줄어들고 나아가 사회생활의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안배경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선정기준

신청기준 단기

-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복불가 서비스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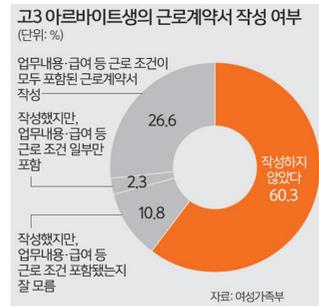
정부24_청년저축계좌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한 일

-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19)씨는 수험생이란 이유로 불합리한 노동조건조차 감내해야만 했음. A씨는 분명 ‘최저시급 지급’이라는 공고를 보고 집 근처 편의점에 지원했지만, 면접을 보러 가니 점주는 당연하다는 듯 “최저시급을 줄 수 없다”고 말했고, 오히려 점주는 “학생 같은 지원자는 많다”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내비치기도 하였음. 당시 치열한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에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던 A씨는 결국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최저시급보다 1000원가량 낮은 임금이라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음⁵⁸⁾.

● 불합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정

-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도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음. 응답자의 10명 중 6명(60.3%)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4%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함.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수능 직후인 11월 말부터 1월까지 고3 학생들의 상담 전화가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며 “고용 조건과는 다른 급여 및 근무시간, 허위 구직광고, 사장의 폭언·욕설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고 설명함⁵⁹⁾.



● 청소년 수당의 필요성

- 청소년수당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친화정책임.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기계발, 복지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
- 특히 청소년수당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

59) 알바 시장 물리는 수험생... ‘나쁜 노동계약’으로 사회 첫 발, 세계일보 이강진, 2019.11.24.

60)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청소년수당’, 전북일보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2020.02.19.

-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영규는 지난해 말 500명의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도민 64.6%가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인 '청소년수당' 지급에 대해 찬성했고 또, 60.6%의 도민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수당을 지급해 '보편적 사회수당' 정책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음.
- 도민들이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것을 수당의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찬성했다는 뜻으로, 현 시대에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배움의 영역에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 주자는 것을 동의한 것임.

정책과제

㉔ '(가칭) 청소년키움통장' 개설

- 근로소득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원
- 소득활동이 가능한 모든 청소년(만 15~24세) 신청 가능 (2회 이상 신청 불가능)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중복 참여 가능
- 신청 시 근로계약서 및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제출
- 신청 청소년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㉕ 청소년 수당 지급

- 여성가족부가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청소년수당 예산 확보
- 만 9~18세 모든 청소년에게 현금성 청소년 수당 지급 (월 10만원, 연 120만원 내외)
- 신청 시 청소년증 혹은 학생증으로 신분 확인
- 청소년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

→ (추가 의견) 청소년 수당 불가능 시

- 문화누리카드 만 9~18세 모든 청소년 보급 (상하반기 각각 10만원)
- 바우처 종류 및 지원범위 확대
(스포츠바우처_헬스나 수영 등 운동센터, 국민행복카드_생리대, 장난감바우처_장난감 백화점, 푸드스탬프_식료품점 등의 바우처 종류 확대 지원)

모니터링 결과

㉔ ‘(가칭) 청소년키움통장’ 개설 <보건복지부, 불수용>

㉕ 청소년 수당 지급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현재 만 9~18세 모든 청소년에게 현금성 청소년 수당 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으나, 위기청소년에 한해서 수당이 지급(청소년 특별지원수당, 문화누리카드 등)되고 있으며, 전북, 고성 등 지역별로 ‘청소년 수당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4-2. 경제·금융 인식 및 이해의 연속성 제고

4-2-1. 청소년 금융(실물경제) 의무교육 실시

청소년의 목소리

-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실물경제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물경제를 모르고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들은 순간 돈을 번다는 생각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청장년층은 경제 의식이 부족한 상태로 주식, 펀드, 부동산에 선불리 투자해 돈을 잃고, 노년층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각종 금융사기에 대처하기 어려워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전 세대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청소년들에게) 의무교육으로 그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배경

- 고교생들의 낮은 경제 이해력
 - 조사대상 고교생들의 경제 이해력은 100점 만점에 평균 55.7점인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 이해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사를 통해 볼 때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 원리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경제교육의 최후 공급자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경제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정부가 경제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⁶⁰⁾
-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이 필요한 이유-청소년들의 잘못된 경제의식 관련 인터뷰⁶¹⁾
 - “10대 학생들 중에도 불법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광고를 통해 접하거나 친구에게 소개받는 식으로 사이트를 알게 돼서 빠지는 경우다.”
 - “꽂머니(공돈)를 만원씩 주는 식으로 학생들을 꾀다. 학생들이 한다고 해서 작은 규모로 하는 게 아니다.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수백만원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불법사이트이다 보니 이겼는데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훌쩍이나 마리오라고 부르는 사행성 도박도 많다.”

60) 고등학생 경제 이해력 테스트 조사결과, 한국경제교육학회 박문규, 2002.12.

61) “불법도박에 빠진 학생들, 학폭으로 연결”, 조선비즈 이종현, 이다비, 2020.01.10.

- “불법도박 문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하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보다 불법도박을 더 문제라고 보고 학생들을 단속할 정도다. 실제로도 그렇다. 불법도박은 결국 학교 폭력으로 이어진다. 불법도박에서 돈을 잃으면 그 돈을 메꿔야 하다보니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려면 경제활동이 필수적인데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불법도박을 하거나 소액대출을 쓰다가 제3금융권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 실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박문제로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15년 168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급증했음.
- 우리나라 성인의 낮은 금융 이해도 및 금융 지식의 필요성
 -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도를 조사해보면 OECD 평균보다 낮음. 연령대별 이해도를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40대, 50대, 20대, 60대, 70대 순으로 나타남.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사람들의 금융 이해도는 58점인 데 반해 250만원 이상 420만원 이하는 63점이며 그 이상의 소득자는 66점 정도임. 20대와 60~70대가 금융사기에 가장 취약하고 투자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것도 낮은 금융 이해력에 기인함. 수입이 많을수록 금융 지식이 늘기도 하지만 금융 지식이 많아야 소득도 늘고 재산을 지킬 수 있기에 금융 이해력 자체가 대단한 삶의 도구라고 볼 수 있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투자나 금융 결정을 하기 쉬우며, 이런 결정은 결국 스스로를 신용 불량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됨.⁶²⁾
 - 금융교육을 청소년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전문가 의견⁶³⁾
 - “국·영·수 과목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부추기는 건 좋은 교육이 아니다. 그 전에 자본과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고 아이들이 돈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존 리(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 중에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그는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함.

62) 돈의 속성, 김승호, 스노우폭스북스

63) “어려서부터 돈·투자 공부해야 한다”...금융교육 활성화 돼야, 시사오늘 박진영, 2020.03.02.

- 이미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금융교육'을 청소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음. 이들은 금융문맹이 과잉부채, 파산 등을 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안 전망 구축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임. 영국은 공립학교 11~16세 필수 과목인 '시민성'에 금융교육을 포함시켰고, 미국은 17개 주에서 금융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했음.

-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융교육의 개선방향(현황)

-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20.4).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함. 중학생은 자유학년제, 고등학생은 수학능력시험 이후 최소 2시간 이상 민간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계획함. 또 교육기관 공동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 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매주1회, 2시간 실시)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임. 특히 수학(주식 투자수익률, 예금 단리·복리에 따른 이자 계산), 국어(문학 등), 역사 등 사회 외 교과에서 올바른 금융태도나 개념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임.⁶⁴⁾

정책과제

㉞ 정규 교육과정 내 '금융(실물경제)' 개설 및 의무교육 실시

-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주 1시간 '금융' 교육 실시
- 평가 방식은 P/F(Pass/Fail)평가로 진행하여 학습 부담감 해소
- 경제 용어 학습 등을 통한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
- 은행, 금융권 은퇴자들에게 영어 과목의 원어민 교사 같은 '금융' 과목 전문교사 지원자격 제공
- 교내 모의 투자대회 등의 경제, 금융 대회 개최 권장
-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에 수준별 금융교육자료가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며,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켜 의무 교육화

64) 중·고교생 최소 2시간 금융교육 받는다, 이데일리 전선형, 2020.04.30.

㉗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

- EBS를 통해 온라인 금융 교육 자료 배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은행 혹은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연 2회, 회당 2시간 이상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실시
- 금융감독원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교와 학교 밖 지원센터 등의 청소년 보호기관으로 확대

㉘ 대학생 금융교육 및 금융교육 선순환 제도 마련

- 금융교육을 접해보지 못한 대학생 또한 금융이해력이 현저하게 낮음.
- 은행 혹은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대학생 대상 금융 강의 실시
(현재 많은 대학교의 학생증이 체크카드로 개설되므로 같은 은행과 협력할 것을 권장)
- 대학교 내 금융 교양과목 개설 권장
- 각 금융권 내 대학생 금융서포터즈 확대 선발
- 대학생 금융서포터즈는 학교 밖 청소년, 사회배려계층, 노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교육 활동 실시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

모니터링 결과

㉚ 정규 교육과정 내 ‘금융(실물경제)’ 개설 및 의무교육 실시 <교육부, 미이행>

- 현재 정규 교육과정 내 ‘금융(실물경제)’개설 및 의무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배제당하고 있는 실태임.⁶⁵⁾⁶⁶⁾
- 금융 당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교육과정에 경제·금융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반영되고 있지는 않음.⁶⁷⁾⁶⁸⁾

㉛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 <여성가족부, 이행>

-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금융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서금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지원이 필요한 학교와 가정 밖의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지원할 계획임.⁶⁹⁾

65) “돈 관리, 공교육으로 접근할 때”, 한겨레, 2021.08.07.
 66) “한국, 금융 교과서 채택 0곳… 미국, 금융위기 후 정규교육 강화”, 조선일보, 2021.03.22.
 67) “밀려나는 경제 교육… 수능서도 퇴출 위기”, 매일경제, 2021.10.11.
 68) “수능끝난 고3, 금융 과목 배운다… 정규교육에도 금융 내용 확대”, 조선비즈, 2021.01.07.

㉘ 대학생 금융교육 및 금융교육 선순환 제도 마련 <금융위원회, 이행>

- 금융감독원은 진학·취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교육내용은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법, 재무관리 방법, 금융꿀팁 등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 대학생의 큰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 대학 주변 거주지를 구할 때의 유의사항 등도 다루고 있음.⁶⁹⁾
- 이 밖에도 금감원은 대학 내 '실용금융강좌' 개설 신청 접수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민간기업 대학생 금융 서포터즈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⁷¹⁾

69) "서금원, 개발원과 청소년 금융교육 지원 협약 外 JT친애·하나카드", 쿠키뉴스, 2020.12.23.

70) "수능 끝난 고3에 금융교육 챙겨주세요", 연합뉴스, 2021.10.12.

71) "금감원,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제9기 출범, 아시아타임즈, 2021.08.24.

5

특별과제

5-1.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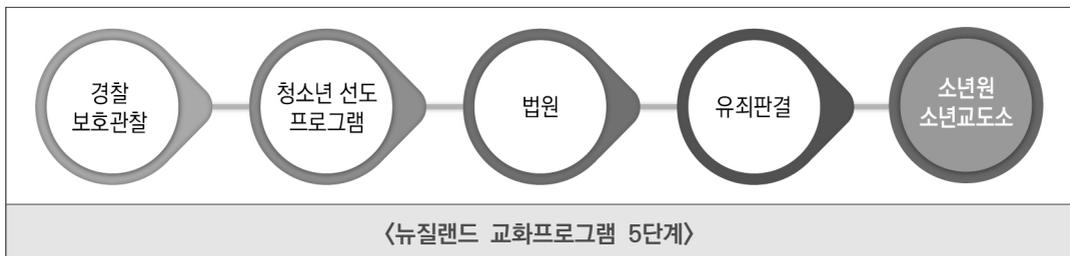
5-1-1.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의 일탈을 조기에 발견하여 교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며, 재비행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 162회에서 언급된,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제안배경

- 뉴질랜드에서는 5단계로 나뉜 교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많은 청소년을 일상으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음.



- 실제 뉴질랜드에서는 교화프로그램 예산확충 직후인 2009년부터 매년 청소년 범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범 선도목적 제도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2012년 4월부터 확대 시행⁷²⁾되고 있지만, 소년범 중 전과자 비율이 2017년 33%⁷³⁾, 2018년 33.7%⁷⁴⁾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72)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권해수, 2018

73) 2019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9

74) 2018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8

- 이외에도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⁷⁵⁾. 때문에 최대한의 일탈 청소년을 확실하게 교화시킨 후 일상으로 복귀시켜 재범, 소년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례를 벤치마킹한 단계별 청소년 교화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함.

정책과제

㉨ 한국형 police diversion(경찰선도프로그램) 도입

- 학교전담경찰관을 청소년 범죄 담당 경찰관으로 전환
 - 처벌보다는 교화에 집중
 - 범죄 발생 징후 포착 시 예방 활동 진행
- 담당 인력 충원을 통한 1인 담당 학교 수 단계적 하향
(예시) 1인 10개교(현행) → 1인 5개교 → 1인 3개교

㉩ 중재 협의 및 민간 투자형 선도 프로그램 도입

- 피해자-가해자 중재 협의 프로그램 도입
 -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실시
 - 사법기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중재자 배석
 - 피해자의 치유를 목적으로 진행
 - 피해자 측에서는 원하는 처벌 수위 의견 피력, 가해자 측에서는 진심어린 사과 진행
- 민간 투자형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마련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목적
 - 민간에서 투자하고, 정부가 성과에 따라 투자자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도입
 - 정기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 도모

75)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권해수, 2018

모니터링 결과

㉔ 한국형 police diversion(경찰선도프로그램) 도입⁷⁶⁾⁷⁷⁾ <경찰청, 미이행>

- 청소년범죄담당경찰관으로 전환의 경우, 청소년 선도제도로 볼 수 있는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전문가참여제는 2020년도 이전부터 시행되던 제도로 선도 및 교화 활동을 위한 정책이 추가 93혹은 보완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특별시, 전라북도를 제외한 타지역 모두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율 불충족 하였으며,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이 지역별 큰 편차가 있었음.

* 2021년 기준 학교전담경찰관 1인 담당 학교 수 11.8개

㉕ 중재 협의 및 민간 투자형 선도 프로그램 도입 <경찰청, 미이행>

- 광주광역시의 '부르미제도' 도입 등 지자체에서 선제적인 대응 및 사안 처리 강화, 관계 회복 및 화해, 조정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으나, 경찰청 차원의 중재 협의 프로그램은 실시되고 있지 않음.⁷⁸⁾
-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소년범 등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프로그램의 일환인 사랑의 교실, 마음나눔교실 등을 외부 위탁 운영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민간투자형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음.⁷⁹⁾

76) 제주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미달'... 배치율 전국 '최하위', 제민일보, 2021.09.27.

77) 대구 범죄소년 재범률 34.2%, 학교전담 경찰은 부족, 대구 MBC, 2021.10.13.

78)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피해율 1.0%...전년 대비 0.1%p ↑, 스마트에프엔, 2021.09.06.

79) "처벌이 능사 아니다"...경찰, 소년 범죄 '선도표준' 마련, 뉴시스, 2020.12.22.

5-1.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대응방향

5-1-2. 스토킹 처벌 규정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일종의 범죄예고입니다. 그러나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리되어 처벌 시 벌금 1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2019) 결과를 보면 스토킹 피해비중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범죄중 스토킹이 높고, 주위에도 이러한 문제를 겪은 친구들이 직·간접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책이 시급성이 높습니다.”

제안배경

- 학교실태조사(2019,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는 언어폭력(8.1건), 집단따돌림(5.3건),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폭행(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스토킹은 학교폭력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피해유형임.

〈 학생 천 명당 응답 건수 〉									〈 피해유형별 비중 〉								
구분	'13년 1차	'14년 1차	'15년 1차	'16년 1차	'17년 1차	'18년 1차	'19년 1차	증감 (건)	구분	'13년 1차	'14년 1차	'15년 1차	'16년 1차	'17년 1차	'18년 1차	'19년 1차	증감 (%p)
언어폭력	13.6	9.4	6.8	6.2	6.3	8.7	8.1	-0.6	언어폭력	34.0	34.6	33.3	34.0	34.1	34.7	35.6	0.9
집단따돌림	6.6	4.6	3.6	3.3	3.1	4.3	5.3	1.0	집단따돌림	16.6	17.0	17.3	18.3	16.6	17.2	23.2	6.0
스토킹	3.7	3.0	2.6	2.0	2.3	3.0	2.0	-1.0	사이버 괴롭힘	9.1	9.3	9.2	9.1	9.8	10.8	8.9	-1.9
사이버 괴롭힘	3.6	2.5	1.9	1.7	1.8	2.7	2.0	-0.7	스토킹	9.2	11.1	12.7	10.9	12.3	11.8	8.7	-3.1
신체폭행	4.7	3.1	2.4	2.2	2.2	2.5	2.0	-0.5	신체폭행	11.7	11.5	11.9	12.1	11.7	10.0	8.6	-1.4
금품갈취	4.0	2.2	1.5	1.2	1.2	1.6	1.4	-0.2	금품갈취	10.0	8.0	7.2	6.8	6.4	6.4	6.3	-0.1
성추행·성폭행	1.3	1.0	0.9	0.8	0.9	1.3	0.9	-0.4	강제심부름	6.1	4.7	4.2	4.3	4.0	3.9	4.9	1.0
강제심부름	2.4	1.3	0.9	0.8	0.7	1.0	1.1	0.1	성추행·성폭행	3.3	3.8	4.2	4.5	5.1	5.2	3.9	-1.3

〈교육부, '2019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2019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제시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프로그램]의 구성 중 심층프로그램(문제 유형 중심)을 보면 비교적 피해유형 비중이 높은 신체·물리,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음. 그러나 이 4가지의

문제유형과 비슷한 피해유형 비중을 차지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육부, ‘2019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어울림 프로그램(학생용)의 구성

구분	기본프로그램 (역량 중심)	심층프로그램 (문제 유형 중심)	교과연계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 (4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역량)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폭력인식대처 • (학교급) 초저, 초고, 중,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유형) 신체·물리,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 (학교급) 초저, 초고, 중,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국어, 도덕, 사회 • (고등학교) 국어, 통합사회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2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역량) 공감,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인터넷윤리의식, 자기조절, 감정조절, 사이버상 갈등관리, 사이버폭력인식대처 • (학교급) 초등, 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역량) 사이버언어 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따돌림, 사이버갈취,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영상유포 • (학교급) 초등, 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국어, 도덕, 사회 (※ 개발 예정) • (고등학교) 국어, 윤리, 통합사회 (※ 개발 예정)

- 만 18~69세 성인 남녀 1,500명(남성 760명 50.7%, 여성 740명 49.3%)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젠더 기반 폭력 근절 및 성차별 해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음. 국민 대다수는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⁸⁰⁾

-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98.8%),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94.5%), ‘스토킹 방지법 제정’(94.4%) 순으로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입법 동의 비중이 높았음. 특히 현행법상 경범죄로 가벼운 처벌만 가능한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지금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함. ‘스토킹 방지법 제정’은 94.4%(여성 98.1%, 남성 90.9%)가 동의하고 있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제정 동의)

-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실은 아직도 벌금 1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지난 2020년 4월 23일,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킹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30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로부터 당한 피해를 알렸음.

8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05.14.~20(7일간) ‘21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 설문 조사

해당 청원은 12,807명이 동의했으며, 조씨는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바둑교습소에 처음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면서 “저의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들이 다수인데 스토킹을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하였음. 조씨는 “그간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통고 조치 벌금 5만원으로 사실상 훈방 조치했음. 어제인 22일 밤에는 으스스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킹 처벌법이 너무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고 말했음. 이어 “스토킹 피해자는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 국회 차원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루주셨으면 한다.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살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음. 현행법상 스토킹은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구체적 범죄 행위’가 없는 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 항목으로 처벌함. (벌칙금 8만원) 이 국민청원 외에도 2020년 08월 16일 기준으로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스토킹’ 관련 청원은 337건으로 스토킹을 언급하면서 범죄처벌 강화를 요구하기도 하며 스토킹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도 있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책과제

㉓ 스토킹 방지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벌금 최대 500만원, 징역 최대 7년으로 처벌 강화
- 필요시 영구한 접근금지명령 및 전자발찌 착용
- 피해자에게 ‘합리적 두려움’을 가지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 광범위한 스토킹 범죄유형에 대해 처벌 가능하도록 함.
-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임시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실시
- 스토킹 조사 시 피해자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
-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필요 시 경제적 지원(휴대폰 번호이동, 주소 이전 등) 제공

㉔ 학교폭력 내 스토킹 처벌 강화 및 교육 실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프로그램] 내 심층프로그램에서 ‘스토킹’에 대한 내용 다룰 것
- 학교폭력으로 스토킹 신고 접수 시 확실한 가해자 처벌 및 가해자 피해자 분리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조치

모니터링 결과

㉓ 스토킹 방지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⁸¹⁾ <법무부, 부분이행>

-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 가능함.
 -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피해자의 분리 조치할 수 있으며,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시행함. 이와 같은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조사 및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가능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상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혹은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 혹은 지속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정함.
 -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시행.
 -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전담조사제를 실시하여 스토킹범죄 전담검사 및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 경찰관 배치 및 피해자 조사
- * 시행부서는 아니지만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함.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담 등을 제공함.

㉔ 학교폭력 내 스토킹 처벌 강화 및 교육 실시 <교육부, 이행>

-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 08. 개정)에 따르면,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통해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개정되는 가이드북을 통해 ‘스토킹’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추가하기로 했음.

81)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여성가족부, 2021

-
- 교내 '스토킹' 피해학생으로 한정하지 않았지만 유사행위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경우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이후에도 폭력 혹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⁸²⁾

8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1년 개정판, 교육부

5-1.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대응방향

5-1-3. SNS(익명채팅 등) 상 피해자 보호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 “최근 N번방 사건의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트위터를 가입해 ‘조건만남’, ‘일탈계’ 등을 검색해보았는데 성적인 게시물에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성매매까지 (검색) 가능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범위가 폭넓고 피해규모도 크기에, 조기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배경

- 청소년 범죄를 다룬 기사⁸³⁾

아이들은 제 발로 텔레그램에 걸어 들어간 게 아니다. 노예로 전락시키는 과정은 악랄했다. 가족, 학교, 친구, 개인정보가 총동원된 전방위 협박을 거쳐 아이들은 꼼짝달짝 못하는 노예가 됐다. 범행은 주로 트위터에서 이뤄졌다. n번방 창시자인 ‘갓갓’은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했다. 개인 트위터에 사적인 사진을 올린 아이들을 타깃으로 했다. ‘게시물 신고가 접수됐으니 링크에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조사에 응하라’는 문자를 먼저 보냈다. 답이 없으면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덧붙였다. 아이들이 신상정보를 내놓으면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며 얼굴사진을 요구했다. 이어 얼굴을 미끼로 전신, 가슴, 상의 탈의 사진으로 요구는 점점 커졌다. 아이들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멈칫하면, 그 사이 신상정보를 털어 집을 쫓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대답을 독촉하고, 숨 쉴 틈 없이 압박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공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현황을 보면 상담 지원 4,787건, 삭제 지원 28,879건, 수사, 법률지원 203건, 의료 지원 52건으로 전체 33,921건을 지원했음.(2019.08.12.기준) 이처럼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여 디지털성범죄의 피해규모를 줄이고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려하기도 함. 따라서 접근성을 확대하여 보편화할 수 있다면 보다 성범죄 대응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임.

83) [N번방 추적기-변외편] 노예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2020.03.11.

▣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운영

사업목적	여성폭력 피해자의 초기 위기 상담과 이를 통한 관련 지원시설 연계 등 피해자 지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피해자 전화, 내방, 방문 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 여성폭력 피해자 사이버상담(채팅, 이메일, 게시판) • 긴급피난시설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업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를 통한 특화지원 강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문상담 및 법률지원 등 연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협의체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정책과제

㉓ SNS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보호체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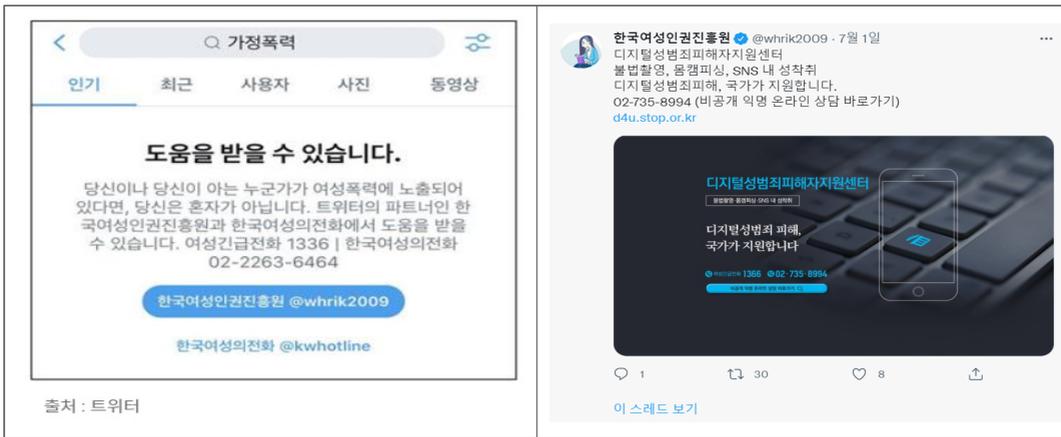
- 카카오톡 등 오픈채팅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배너 광고 노출 의무화
- 배너 광고 클릭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으로 연결
- 오픈채팅 신고 목록에 '디지털성범죄' 신설 권장
- '디지털성범죄'로 신고된 오픈채팅은 경찰청으로 접수
- 트위터 내 기존 배너 광고 의무화 대상 해시태그 확대
(예시) '일탈계' 해시태그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불건전한 해시태그
- 기존 광고 문구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성소수자 모든 피해자들을 언급하도록 수정
(예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폭력'
→ '성폭력', '성적으로 부당한 상황'
-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가해자 처벌 가능하다는 내용 언급하도록 수정

모니터링 결과

㉓ SNS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보호체계 확대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트위터(TWITTER)는 폭력 관련 키워드 검색 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한국여성의 전화 안내 메시지 팝업기능을 추가함.



- 오픈채팅 신고 목록에 ‘디지털성범죄’ 신설 권장 내용과 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통방지)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지정 고시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전남, 세종, 울산 등 6개 시·도지역에는 신고·삭제 요청을 위한 지정기관이 부재하며, 2021년 기준 신고요청된 건수 중 46%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트위터 내 기존 광고문구에 남성, 성소수자 등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가해자 처벌 가능하다는 내용도 시행되고 있지 않음.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인 쇄: 2021년 12월

발 행: 2021년 12월

발행인: 이광호

발행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5층

02-330-2800(代)

인쇄처: 한결엠
